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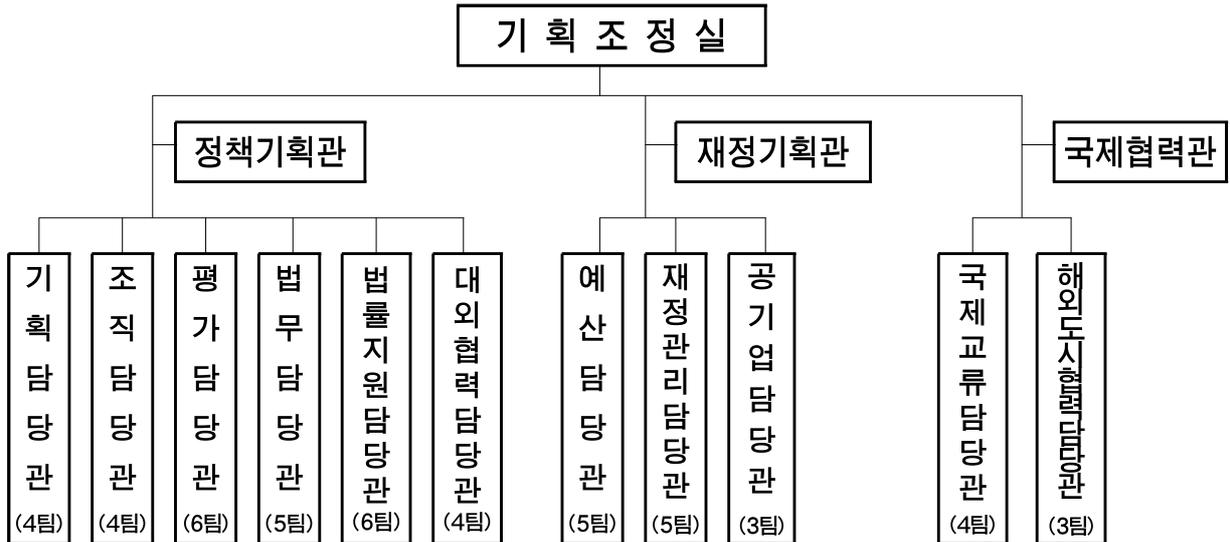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17. 2

기 획 조 정 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1담당관, 49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9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279/276명(정원/현원)

(17. 2. 20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279 / 276	233 / 231	38 / 37	1 / 1	7 / 7
기 획 담 당 관	32 / 30	29 / 29	1 / 1		2 /
조 직 담 당 관	28 / 28	26 / 26	1 / 1		1 / 1
평 가 담 당 관	33 / 32	31 / 30	1 / 1		1 / 1
법 무 담 당 관	25 / 24	23 / 22	1 / 1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29 / 31	14 / 15	15 / 15		/ 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21 / 21	16 / 16	5 / 4		/ 1
예 산 담 당 관	33 / 32	32 / 31			1 / 1
재 정 관 리 담 당 관	22 / 21	21 / 20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17 / 17	15 / 15	2 / 2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4 / 25	15 / 16	7 / 7	1 / 1	1 / 1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15 / 15	11 / 11	4 / 4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공약총괄 관리 등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사무위임전결, 지방분권 업무 및 직무발명 등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총괄,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 계약(협약) 심사 ○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
대외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관련 업무 총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중기재정계획 수립 ○ 예산성과금 업무 등
재정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투자심사, 市 민자사업 관리, 기금운용·관리 업무 총괄 ○ 市·투자출연기관 통합재정관리, 참여예산, 국고보조금 관리 등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채관리 등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계획 수립 ○ 자매우호도시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산 총 규모 : 1조 7,462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사업수)	2017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956,995 (80)	1,746,218 (77)	△210,777
일반회계	923,110 (62)	519,436 (60)	△403,674
도시개발특별회계	215,112 (-)	82,912 (1)	△132,2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6	-	△316
기금	818,457 (18)	1,143,870 (16)	325,413

○ 일반회계 : 총 5,19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사업수)	2017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923,110 (62)	519,436 (60)	△403,674
기획담당관	1,275 (4)	1,035 (3)	△240
조직담당관	73,813 (12)	98,699 (10)	24,886
평가담당관	2,195 (7)	1,727 (7)	△468
법무담당관	539 (3)	555 (3)	16
법률지원담당관	6,089 (2)	4,616 (2)	△1,473
대외협력담당관	4,264 (6)	3,843 (6)	△421
예산담당관	165,227 (3)	188,349 (3)	23,122
재정관리담당관	659,167 (8)	210,328 (8)	△448,839
공기업담당관	1,525 (5)	788 (4)	△737
국제교류담당관	2,552 (5)	4,051 (7)	1,499
해외도시협력담당관	6,462 (7)	5,444 (7)	△1,018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829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사업수)	2017년 (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215,112 (1)	82,912 (1)	△132,200

○ 기금 : 총 1조 1,439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사업수)	2017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818,457 (18)	1,143,870 (16)	325,413
재정투융자기금	629,087 (-)	805,823 (-)	176,736
감채기금	167,578 (-)	309,800 (-)	142,222
남북교류협력기금	11,477 (1)	11,641 (1)	164
대외협력기금	10,315 (17)	10,912 (15)	597
지역개발기금	- (-)	5,694 (-)	5,69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시정성과 창출 및 체계적 정책조정

민 선 6 기
시 정 성 과
창 출
지 원

시 민 권 익
향 상 을
위 한
제 도 개 선

건 전 재 정
실 현 과
시 민 참 여
확 대

교 류 협 력 에
기 반 한
서울의 위상
제 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① 정책조정 및 지원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
- ②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적정 조직체계 구축
- ③ 2017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방안 추진
- ④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①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추진
- ②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③ 민생·경제·분권 위한 법령개선 및 규제개혁 추진
- ④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⑤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 ⑥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 ① 2017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 ② 도시노후화 예방 위한 선제적 정비계획 수립
- ③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예산제 추진
- ④ '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 ⑤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 ⑥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⑦ 서울형 투자·출연기관 경영모델 정립
- ⑧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 ①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강화
- ②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
- ③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④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제고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① 정책조정 및 지원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

②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적정 조직체계 구축

③ 2017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방안 추진

④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1 정책조정 및 지원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

'17년 선제적 정책조정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시책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조직·예산·법무 등 총력 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성과 창출

□ 추진방향

-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전적·대안제시형 성과 점검
- 부서간 협업·공유 활성화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조직·법률지원·예산·재정 등 종합적 집중 지원으로 성과 극대화 견인

□ 추진내용 : 실·본부·국간 정책조정 및 총괄 지원 시행(연중)

정책
조정

- ▶ 핵심사업 성과관리회의 등을 통한 연중 성과관리 및 평가 실시
- ▶ 주요 갈등과제 조정 및 신속 해결로 시민과의 성과약속 이행
- ▶ 부서간 협업·협력 등을 통한 문제해결형 회의체계 상시 가동 등

조직
정비

- ▶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한 기구신설, 정원조정 등 선제적 조직 정비
- ▶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위한 조직진단 및 정원관리 체계 확립
- ▶ 시정연구 활성화로 주요 정책수립 및 현안문제 해결 지원

법률
지원

- ▶ 주요 시정분야별 전담변호사제 등 전폭적 법률 지원으로 분쟁 사전차단
- ▶ 민생·혁신·분권 등 개혁과제 입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집중 추진

예산
조정

- ▶ 핵심사업 필요예산 적기 지원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 ▶ 시민참여에 기반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으로 재정민주주의 확산

대외
협력

- ▶ 시의회·국회·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정책 교류·협력 강화
- ▶ 국고보조금 등 추가재원 확보 및 법령·제도개선 위해 국회·정부 지속 설득

2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적정 조직체계 구축

민선6기 핵심과제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직 지원을 추진하고 효율적 조직·정원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강화

□ **추진방향** : 효율적 조직·정원 관리를 통한 핵심과제 집중 지원

	환경변화	이행방향
외부여건	실국본부 운영기준 변화 (17개 → 16~18개) 전문임기제(정원 외) 제도 도입	국 단위 전환기준 마련 전문임기제 직위 발굴
내부여건	핵심과제 성과 조기 달성 필요 지속·반복적 조직정원 요구 발생	연내 준공시설 및 집중 추진사업 지원 조직진단 및 정원관리 체계 확립

□ **그간 추진실적**

- 민선 6기 핵심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추진
 - ‘일자리노동국’ 분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신설(‘16.2)
 -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 추진단’ 신설(‘16.7)
- 증원·재배치를 통해 핵심과제 추진 분야 47개부서 총 214명 보강

□ **중점 추진내용**

① 국 신설 및 적정기구 보강

- 국 신설 및 임시기구 정비 추진(‘17.7)
 - 7개 기획관 중 업무 중요도 및 대외 상징성을 고려하여 1개 직위를 전담 국으로 전환
 - 7개 임시기구 중 1개를 정규화하여 조직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17~)
 - 정책결정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3개 이내)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발굴 후 행자부와 협의 추진
 - ※ 전문임기제 공무원 : '17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정책결정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보좌 직위

② 현안 핵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 2017년 준공되는 주요 시설 및 집중 추진사업에 대한 조직 지원
 - 서울역 7017, 석유비축기지 공원화, 경제민주화 2단계 등 핵심사업 지원
- 한시기구의 기한 연장을 통한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 ① 지역발전본부(~'17.6), ② 문화시설추진단(~'17.8) ⇒ '기한 연장' 행자부와 협의 추진('17.2)

③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관리 추진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
 -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상·하반기 각 2개 실·국·본부를 선정, 기능재편 및 적정 정원 규모 등 분석
- 사업의 축소·종료·안정화 등에 따른 정원조정 수요 발굴(상·하반기 각 1회)
 - '16년 정원조정을 하지 않은 부서와 수시 증원요청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 조정 및 '17년 핵심과제 추진부서 재배치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개편 방침 수립 : '17. 2월
-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추진 : '17. 3 ~ 4월
 - ※ 제273회 임시회 상정(예정)
-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17. 5 ~ 6월
-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례 개정 사항 시행 : '17. 7월 ~

3 2017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 방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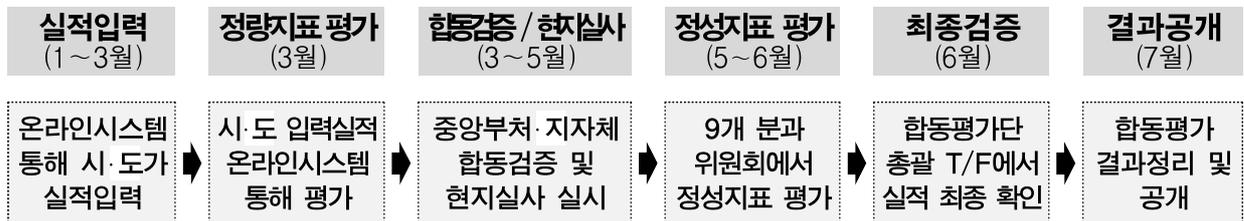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별 실적관리 강화를 통해 평가 결과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 집중관리 및 자체 평가시스템(SVPS)* 통한 실적관리 강화
 - * SVPS(Seoul Virtual Policy Studio, '15.5)는 행자부의 VPS 실적입력에 대비하여 구축한 서울시 자체 평가시스템으로 지표별 실적, 증빙자료 등을 월별 관리하는 행정평가정보시스템
- 대도시에 불리한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건의 등 지속적 개선 노력

□ 사업개요

-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 주관 : 행정자치부
- 평가대상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국가주요시책(기간 : '16.1~12)
- 평가기간 : '17. 1 ~ 6월
 - ※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17년도 실적관리 및 지표개선 병행 추진
- 평가분야 :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 173개 세부지표
 -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평가방법 : 市部(8개), 道部(9개)로 구분하여 분야별 가/나/다 등급 평가
- 평가절차



※ 정부합동평가결과에 따라 행자부 특별교부세 교부 예정('17.9)

- 소요예산 : 19백만원 ※ 예산사업명 :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 중점 추진내용

◆ '16년 평가결과(평가대상: '15년 실적) : 9개 분야 / 가등급 1, 나등급 3, 다등급 5

- [가등급] 환경산림
- [나등급] 일반행정, 문화가족, 중점과제
- [다등급]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안전관리

○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한 월별 실적관리 강화

- 서울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SVPS)을 활용하여 실·본부·국과 자치구 실적을 포함, 지표별 중간점검을 통해 선제적 실적관리(하반기 매월 점검)
- 분야별 가중치 높은 지표 및 신규 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

○ 부서별 책임성 강화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기관별 성과평가(대내외 협력성과 부문)에 정부합동평가 결과 반영
- 유공공무원 정부포상·시장표창 및 자치구 특별교부세 교부 등 실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대도시에 불리한 평가지표 발굴 및 개선 노력 지속 추진

- 인구수, 국고 차등보조 등 대도시 특수성으로 인해 실적 제고에 한계가 있는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 시·자치구 의견수렴 및 중앙정부에 삭제·조정 건의
- '17년 평가지표(안)에 대한 개선요구 : 72건 건의사항 중 28건 반영 완료('16.5)
 - ▶ '농작물 병해충 조사율' 및 '임도 시설 실적률' 지표에 대한 평가 대상 제외

□ 추진일정

- 평가지표에 대응하는 '16년 실적 입력 : '17. 1 ~ 3월
- 중앙부처·지자체 합동검증 및 현지실사 대응 : '17. 3 ~ 5월
 - ※ '16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공개('17.7, 행정자치부)
- '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17년 실적 관리 : '17. 8월 ~

4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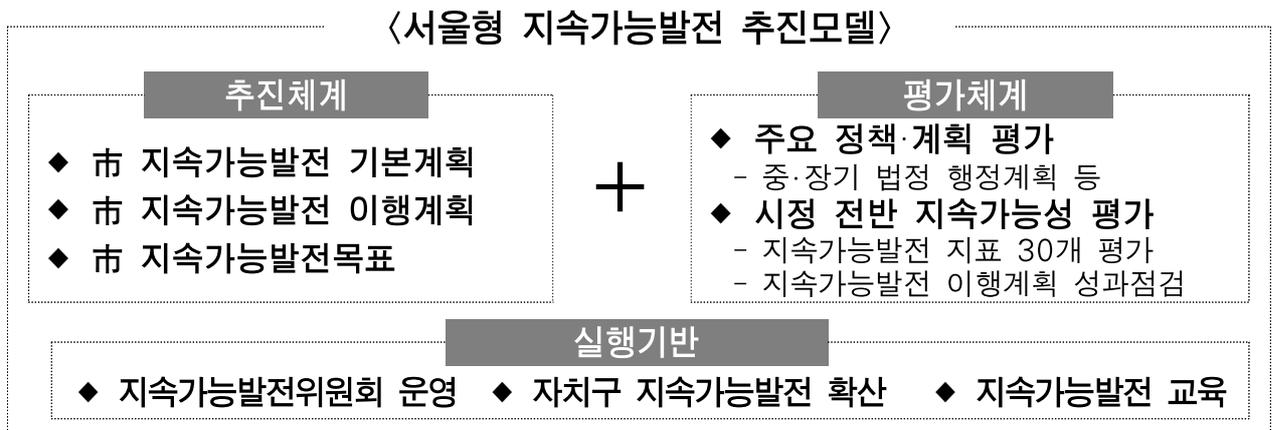
‘지속가능성’을 서울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내실화 추진

□ 추진방향

-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본격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상 구현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운용으로 시정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인식기반 확대방안 다각화

□ 사업개요

-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투트랙(Two-track) 평가체계’의 통합적 운영으로 시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소요예산 : 79백만원 ※ 예산사업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그간 추진실적

-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13. 5월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15. 4월
- 제1회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 : '16. 11월
- 「市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모델」 학술용역 : '16.6 ~ 12월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 '17. 1월

□ 중점 추진내용

- 서울시의 독자적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운영
 - 주요 정책과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절차 확정 및 검토 실시('17.3~)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17.8)
 - 점검·평가 결과 토대로 「市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성과 및 과제 전파('17.11)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서울' 브랜드 확산
 -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별 라운드테이블 운영('17.4~) 및 「제 2회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17.10)
 - 라운드테이블, 대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17.10)
 -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 시민 공모전 개최를 통한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17.5)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표준모델 확산 및 교육을 통한 추진기반 확대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표준모델* 제시 및 전 자치구 확산 추진('17.3)
 -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표준모델 수립 위한 학술용역 실시 완료('16.12)
 - 지속가능발전 관련 인재개발원 교과과정 지속 편성
-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강화
 - 과제별 소위원회와 TF 유기적 구성·운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실행력 강화
 - 위원회 운영성과 바탕으로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17.11)

□ 추진일정

-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연중) : '17. 3 ~
- 시민 공모전 개최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모델 확산 : '17. 5월~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지표 평가 : '17. 8월~
- 제2회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 개최 : '17. 10월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최종 수립 : '17. 10월
- 「市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및 홍보 : '17. 11월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①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추진

②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③ 민생·경제·분권 위한 법령개선 및 규제개혁 추진

④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⑤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⑥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1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추진

서울시가 앞장서고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에 녹아드는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

□ 추진방향

- 서울시 주도의 지방분권 실천 추진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형 지방분권 과제 촉진·지원
-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운동 확산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조성

□ 사업개요

- 목 적 :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및 과제 실행, 시민 공감대 조성 등
- 소요예산 : 112백만원 ※ 예산사업명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그간 추진실적

- 서울시 지방분권 선도모델로서 자치영향평가제도 시행
 - 상·하반기 총 2회 자치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 6개 평가대상에 대해 심의('16.4월, 9월)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
(자치구 의견 수렴)

+

행정·재정 영향요인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

서울형 지방분권 선도모델
(市·자치구 사전협의·조정)

- 자치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16.8)
 - 지방분권 목표, 추진방향, 지방분권 과제 발굴, 실행계획 등 마련
 - ※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자문회의 개최('16.4월, 6월, 총2회)

○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시민공감대 확산**

-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 초청, ‘지방분권협의회 전국토론회’ 개최(‘16.6)
-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쇼’ 개최(‘16.7월, 6개 자치구 1,300명 참석)
- 시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16.10월, 서울시-한겨레 공동주최)
- 지방분권 20년의 기록을 담은 백서 ‘지방자치 서울, 20’ 발간(‘16.10)

□ **중점 추진내용**

○ **타 지자체 지방분권협의회와 연대 통해 지방분권 이슈 전국적 확산 추진**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 개최(‘17.2.7)
 -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 25개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의 협의체(광역12, 기초13)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역 순회 ‘지방분권 촉구대회’ 개최 추진(연중)
- 지방분권 어젠다 발굴·확산 및 국회·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의지 촉구

○ **자치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치영향평가제도’ 지속 추진**

- 자치구의 재정·인력 부담이 발생하는 시책사업 및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협의

《자치영향평가제도(‘16.4~)》

- ▶ 평가대상 : 자치구의 재정·인력부담 등 발생이 예상되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조정이 필요한 시책사업 또는 자치법규
- ▶ 평가절차 : [市] 자체발굴·[區] 평가요청 → [市]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 → [市] 자치구 의견수렴 → [市]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확정·통보
 - ※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서울시(3), 자치구(3), 지방분권전문가(5)

○ **자치구와 함께 하는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확대 추진(6개→25개 자치구)**

○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자치 주간 운영(‘17.10.25~31)**

- 지방분권 주제 시정연구 논문 공모, 자유토론 마당 등 시민 공감형 행사 추진
- 지방분권 유공자에 대한 격려, 연구발표, 기념행사 등 개최

2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효율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기존 민간위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영역으로의 시정 핵심가치 확산

□ 추진방향

- 수탁기관에 대해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
- 수탁기관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한 시정 핵심가치 내재화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통일된 회계감사 지침, 정산매뉴얼 등 효과적인 외부 회계감사시스템 마련
-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
- 관행적 재계약 문제 등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 개선대책 마련

○ 민간위탁 사무현황 : 총 370개 사무('16.12.31 기준)

○ 소요예산 : 714백만원 ※ 예산사업명 : 민간위탁제도 운영

□ 중점 추진내용

①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한 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 회계감사 대상확대 및 회계기준 제정을 통한 민간위탁금 투명성 강화
 - 회계감사 대상 확대(연 사업비 10억원 이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
 - 공통회계기준 신설 및 분야별(복지, 경제 등)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 마련
- 제3자 재위탁 기준 및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다양한 위탁사무의 분석을 통해 집행사례별 제3자 재위탁과 단순 용역의 구분 방법 등 기준 제시
 -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 의무불이행 사례를 유형화하여 불이행 정도에 따른 단계별 세분화된 제재조치 마련

○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검토

- 민간위탁 존속기한(3년 이내, 1회 재계약 허용 등)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기한 만료 시 위원회 심의 통해 해당사무 공급방식(민간위탁 적정성) 원점 재검토

② 위탁사무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지표 개선

- 위탁사무 유형(시민이용시설형, 기반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형)별 평가지표 적용으로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 평가지표 사전확정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 협약체결 전 평가지표 확정 통해 '목표설정-실행-평가'의 합리적 성과관리 체계 확립

③ 시정 핵심가치의 민간영역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 수탁기관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 고용승계·생활임금 등 서울시 근로자 보호제도 및 위탁사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위탁분야 근로자 노동권리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 민관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협치 가치 구현

- 수탁기관·소관부서·지원부서 간 정기 간담회 개최(연2회 이상) 및 상시 소통 공유방 운영 활성화 통한 현장 요구 반영

□ 추진일정

- 통합 회계감사 실시 및 통합 회계기준 마련 : '17. 1 ~ 5월
 - 통합 회계감사 실시 : ~'17.3월까지 / 통합 회계기준 마련 : ~'17.5월까지
- 제3자 재위탁 기준 및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 '17. 2 ~ 8월
-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위한 의견수렴 등 사전검토 : '17년 상반기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 '17. 3 ~ 5월
- 수탁기관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17. 2 ~ 8월

3 **민생·경제·분권** 위한 법령개선 및 규제개혁 추진

국회의 개혁입법에 발맞춰 민생·경제·분권을 중심으로 법령개선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예방·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중심의 법령개선 추진
- 분야별, 권역별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예방하여 주요정책 입안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

□ 중점 추진내용

① 민생·경제·분권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 민생안정, 지방분권 등을 위한 법령개선 과제 입법화 추진
 - 그간 지속 추진해 온 불합리한 법령개선 과제 추진('12년 이후 507건 발굴, 93건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입법 추진(건의) 중
 - 중앙부처·국회 등 지속 건의와 홍보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등 10대 개혁입법 건의과제 선정

연번	분야	우리시 10대 추진(건의)과제
1	민생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제정
2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3		이자제한법 금리상한을 하향조정 및 대부업 등록제 시행
4	경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조사·고발요청권 지자체 이양
5	개혁	근로자이사제 도입
6	지방 분권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로 자치법규 위상 제고(지방자치법 개정)
7		자치기구·정원 운영의 지자체 자율권 강화
8		법정수입사무 도입 및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9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10		온전한 민족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정 특별법 개정

②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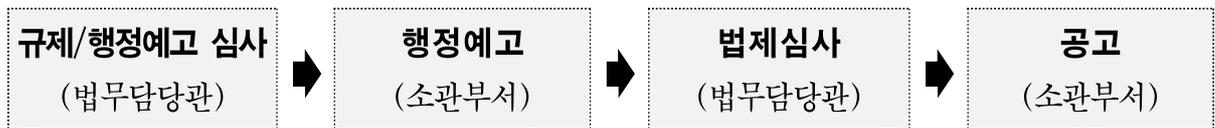
-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건의 및 개선 지속 추진
- 산업입지·도시주거 등 분야별 특화규제 발굴·개선

《 '16년 주요 추진실적 》

- ▶ 규제 개선 과제 31건 발굴·건의, 중앙부처 협의 결과 10건 수용
- ▶ 시 법령·제도개선 사례집 「바꾸어요, 희망으로!」 발간·수록('16.7)

○ 행정입법 대상 규제 및 법제 심사제 도입

- 불필요한 규제 예방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 행정입법(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해 규제 사전심사 및 법제심사 실시



○ 공개규제법정, 시민공모 등을 통한 시민참여 방식의 규제합리화

- 시민·전문가 참여, 공론의 장을 통해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생활불편 규제사례 발굴 시민공모 추진 및 '불합리 규제신고센터' 홍보 강화

○ 시민에 다가가는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 서울기업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기업애로 해소 추진
- 25개 자치구의 전국규제지도 평가* 순위 개선 적극 지원

* 전국규제지도 평가 :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자체간 경쟁유도를 통한 규제완화를 위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 규제개혁 우수자 인센티브 및 표창 수여 등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 촉진

□ 추진일정

- 개혁입법 관련 입법화 추진 : '17. 1월 ~
- 행정입법 대상 규제·법제 심사제 도입 : '17. 3월
- 법령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규제개혁 지속 추진 : '17. 3월 ~

4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도모

□ 추진방향

- 행정심판 운영개선을 통한 재결의 신속성 제고 및 공정성 강화
- 시민 현장중심의 행정심판 운영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운영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 위원정원 : 50명 이내('16.3.29호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30명 → 50명 증원)
※ 현원 : 30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5명)
- 구 성 : 매회 8명(위원장 포함)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 회의개최 : 매월 2회(1, 3주 월요일 또는 2, 4주 월요일)
-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제외) 및 자치구 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 소요예산 : 223백만원 ※ 예산사업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중점 추진내용

①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 행정심판 처리 절차 및 서식 간소화로 재결기간 단축
 - － 긴급처리 필요한 집행정지 사건 처리 간소화 등으로 위원회 1회당 재결건수 증가 및 1건당 평균 재결기간 단축('16년 90일 → '17년 80일)

- 특히, 유사·반복적인 민생사건(음식점, 운수 등)의 경우 처리절차 및 서식 간소화로 1건당 평균 재결기간 추가 단축

《 '16년 주요 추진실적 》

- ▶ 위원회 1회당 상정안건 처리현황 : ['15년] 57건 → ['16년] 66건
(위원회 1회당 민생사건 처리현황 : ['15년] 19.8건 → ['16년] 26.0건)
- ▶ 상정안건 1건당 평균 재결기간 : ['15년] 98일 → ['16년] 90일
(민생사건 1건당 평균 재결기간 : ['15년] 81일 → ['16년] 73일)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증원(현원 30명 → 50명 이하)을 통한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재결의 신속성 제고('17.3)

2] 시민·현장 중심의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추진

- 구술심리 운영 :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주·부심제도 운영 :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법률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가를 주·부심으로 지정
- 현장증거조사 실시 : 고난도 사건(개발행위허가)의 행정심판 전 현장조사 추진
- 장애등급 결정 사건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외 장애유형별 전문의에게 별도 자문 의뢰

3] 행정심판 주요사례 전파를 통한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

- 자치구 담당자 역량 제고 위한 재결레집 제작·배포 및 市 홈페이지 등재
-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래연습장업협회 등 통한 민생사건 법령위반사례 전파
- 재결의 적절성과 행정소송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소송 진행현황 파악

□ 추진일정

-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증원 : '17. 3월
- 재결레집 제작·배포 및 행정심판 사례 전파 : '17. 5월

5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

상위법령 제·개정,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시민권의 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령 등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해소
-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권의 침해 방지

사업개요

- 市 자치법규 현황 : 총 757개(조례 545개, 규칙 212개)
- 정비대상 : 4가지(유형 ① ~ ④)
 - [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 [유형 ②]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 [유형 ③] 법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 [유형 ④] 기타 맞춤형 등 오기사항 등이 있는 자치법규
- 추진절차
 - [1단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중앙부처와 우리시가 조사·발굴
 - [2단계] 발굴된 정비과제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 조회·검토 후 정비과제 확정
 - [3단계] 정비과제 중 중요 사항은 소관부서 검토 후 개별 개정, 경미한 사항은 일괄 개정 추진

그간 추진실적

- '16년 1,647건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1,275건 완료, 372건 추진중

※ 자치법규 정비실적('16.1~12)

(단위 : 건)

구 분		정비대상					정비실적	
		계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유형④	완료	추진중
계		1,647	214	153	138	1,142	1,275	372
중앙 부처	㉠ 법제처 협업과제	108	12	66	30	-	57	51
	㉡ 불합리한 지방규제	58			58		50	8
	㉢ 법령 위임조례	102	102	-	-	-	39	63
市	㉣ 자체정비	1,379	100	87	50	1,142	1,129	250

㉠ 법제처 협업과제 : 법제처와 서울시 합동으로 과제 발굴

㉡ 불합리한 지방규제 :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합동으로 11대 분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포함 발굴

* 11대 분야 : 건축, 국토, 농업, 산업, 환경,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보건복지, 산림, 교통

㉢ 법령 위임조례 : 법령 공포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이행여부 점검(법제처 수시 통보)

㉣ 자체정비 : 시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과제 발굴

중점 추진내용

- 최근 1년간 미개정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과제 발굴
 - '17년도 기준, 1년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 규칙 중 정비유형별 과제 발굴
- 발굴된 정비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서와 검토·협의를 거쳐 정비과제 확정
 - 미정비 사유, 정비가능 여부, 정비추진 일정 등 검토·협의
- 정비과제 특성·중요도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개정) 추진
 - 중요한 정비과제는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 추진하고, 경미한 과제 (맞춤법, 오타자 정비 등)는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개정 추진
- 정비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
 - 정비과제 중 미정비된 자치법규 집중 관리하여 법제적 지원을 통한 정비독려

추진일정

-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과제 발굴 : '17년 상반기
- 소관부서 협의 및 정비 추진 : '17. 9월

6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현장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추진방향

- 마을변호사 제도를 서울시 424개 모든 동(洞)으로 전면 확대 실시
- 공익법무사가 다중 이용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법률상담 제공 추진

사업개요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

- 주요내용 : 마을(洞)마다 지정된 전담 변호사가 법률문제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동(洞) 및 지원인력 : 344개 동, 622명('16년기준, 서울시 전체 洞의 80%)
※ 16년도 대상동 확대 : 183개동 → 344개동('16.8.1)
- 그간 추진실적('16.1~12)

(단위 : 건)

구 분	계	방문 상담	전화 상담
계	5,950	3,052	2,898
월평균	496	254	242

② 서울시 공익법무사

- 주요내용 : 등기·공탁·임대차 등 특화된 상담내용을 위하여 시설별로 전담 법무사 방문 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시설 및 지원인력 : 71개 시설, 89명
- 전통시장(55개), 종합사회복지관(11개), 산업단지·창업보육센터(5개) 등
- 그간 추진실적('16.5~12)

(단위 : 건)

계	전통시장	종합사회복지관	창업센터 등	전화
187	125	52	8	2

□ 중점 추진내용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市 전역으로 확대하고 시민 인지도 제고

- 서울시 모든 동(424개)으로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실시('17.7)
 - 서울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동 전담 변호사와 법률상담 가능
 - 단계별 추진현황



- 시민 인지도 및 마을변호사 자긍심 제고 지속 추진
 - TV, 라디오, 자치구 소식지 등 생활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 강화
 - 사례발굴 홍보 및 표창 등을 통하여 마을변호사 참여에 대한 자긍심 고취

② '서울시 공익법무사' 지원 분야 확대

-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에 서울시 공익법무사 참여('17.2~)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법률상담
 - 등기, 공탁, 임대차 등 특화된 내용을 정기적(주 3회)으로 상담

* 찾아가는 서울시청(시민소통기획관) : 개조트럭(3.5톤, 1대)으로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민원 즉시 접수·처리
- 상담시민 및 법무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상담 대상시설 등 확대 추진
 -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업으로 법무사를 총원하고 상담 내용 질적 향상 추진
 - 서울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등으로 확대 추진

□ 추진일정

- '서울시 공익법무사' 운영 활성화 수요조사 실시 : '17. 3월~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계획 수립 : '17. 4월~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 ① 2017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 ② 도시노후화 예방 위한 선제적 정비계획 수립
- ③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예산제 추진
- ④ '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 ⑤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 ⑥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⑦ 서울형 투자·출연기관 경영모델 정립
- ⑧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1 2017년 예산 신속집행 추진

글로벌 저성장 흐름과 내수둔화 우려 등 경기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 적극 지원

□ 추진방향

-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비, 1/4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경기 파급효과가 큰 SOC, 일자리사업 등 현장예산 중점 추진 및 관리
- 계획적인 재정 신속집행으로 이월·불용 최소화로 재정효율화 도모

□ 추진목표 ※ '16년 추진실적 : [1/4분기] 집행률 23% / [상반기] 집행률 52%

- [1/4분기] 목표 집행액 : 4조 9천억원 / 목표 집행률 : 26%
- [상반기] 목표 집행액 : 10조 9천억원 / 목표 집행률 : 58%

– 2017년도 예산현액 및 신속집행 대상, 추진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집행액	1/4분기 목표 집행액
		대 상	제 외*		
市(본청)	32조 1,326	18조 8,090	13조 3,236	10조 9,092	4조 8,903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중점 추진내용

① 중점사업 신속집행 강화

- [대상사업] 서민생활안정 등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 일자리사업(1조원), 서민생활안정 사업(5조 8천억원), SOC사업(3조 7천억원)
- [관리방법] 사업별 공정관리 모니터링 및 실시간 실적점검
 - SOC사업 : 1/4분기 발주·계약,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 일자리사업 등 : 모집일정 단축, 홍보 강화로 조기발주 등

②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지원·관리 방안

○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을 활용한 예산의 신속집행 독려

※ 「지방행정 신속집행 10대 지침(행정자치부)」 주요내용

▶ 계약제도 적극 활용

① 긴급입찰, ② 선금 집행 활성화, ③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세출예산 집행 강화

④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⑤ 민간경상보조금의 월별 교부 한시적 제외, ⑥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⑦ 일반운영비 집중 집행

▶ 조기집행 추진 지원

⑧ 신속집행 추진체계 운영 강화, ⑨ 일시차입금 이자발생액 보전, ⑩ 신속 집행 평가·포상

○ 투자사업의 공정관리 철저

- [사업부서]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 [기획조정실]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진척도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기 예산배정

○ 자치구 신속집행 관련 市 보조금 교부방법 개선

- 조정교부금 상반기 교부율 상향 : [‘16년] 58% → [‘17년] 65%
- 특별교부금 상반기 교부개시 시기 조정 : [‘16년] 3월 → [‘17년] 1월
- 복지시설 운영비 등 사업비 교부주기 개선 : [‘16년] 월별 → [‘17년] 분기별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집행률 제고대책 강구

- 격주 단위 신속집행 실적 공표 및 월 1회 점검회의 개최
- 신속집행 실적 기관평가 대외협력 항목 반영(30점중 5점)
- 명시이월 지양,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조기발주 독려
- 실집행액을 고려한 실·본부·국별 18년도 예산한도액 설정 등 예산편성 반영

□ 추진일정

- 신속집행 추진관련 실적점검회의 정기 개최 : 매월
 - 성과관리회의 등과 연계, 부진사업 집행실적 제고방안 보고 등 진도체크
- 상반기 신속집행 종합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 : '17. 7월

2 도시노후화 예방 위한 선제적 정비계획 수립

기반시설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선제적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 재정운용 계획에 기반한 시민안전 확보

□ 추진방향

-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하여 기반시설 수명 연장·관리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성능개선형 유지보수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토대로 계획 수립

□ 서울시 기반시설 실태

- 기반시설 노후화로 붕괴, 도로함몰 등 재난 위험을 초래하고 관리부담 증가
-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본격화되고, 최근 노후기반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현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25년에는 유지비용이 약 4배 증가할 전망
- 기반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예방적·선제적 조치 필요

※ 유형별 기반시설 노후화 현황('16.12월말 기준)

구 분('16년)	도로 시설물(개)	지하철 시설물(개)	상수관로(km)	하수관로(km)
노후시설 (전체)	286(1,137)	224(618)	1,002(13,697)	5,254(10,581)
현재 노후화율	25%	36%	7%	50%
10년 뒤 노후화율	53%	54%	49%	71%
20년 뒤 노후화율	77%	92%	85%	84%

□ 중점 추진내용

① 도시노후화 대응 지침 마련 및 TFT 구성·운영

- 기획조정실, 안전총괄본부, 서울연구원 등으로 TFT 구성
- 분야별 노후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범위와 기준 마련
- 소요재원 파악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②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유지관리 계획 도입
 - 현상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를 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반영된 부품 및 장비를 도입한 성능개선형 유지보수 추진
- 체계적·선제적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의 효율화 도모
 - 기반시설 하자 발생 후 유지보수를 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일상점검을 통해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명을 관리하여 관리비용 절감

※ 해외 선진국의 기반시설 관리 사례

▶ 북유럽의 노후기반시설 점검제도

-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은 매년 기반시설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5~6년 주기로 상세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 미국의 사후적 기반시설 관리

- 선제적 관리에 실패한 미국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01년 1조 3천억 달러에서 '13년 3조 6천억 달러로 급증

③ 중장기 투자재원 확보방안 검토

- 도시노후화 TFT 운영결과를 토대로 노후기반시설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순세계잉여금 활용, 국비 보조금 확보, 민간투자 유치 확대 등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검토

□ 추진일정

- 부서별 시설물 관리현황 공유 : '17. 2 ~ 3월
- 시설물 실태조사 및 투자 우선순위 기준검토 : '17. 4 ~ 5월
- 노후기반시설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 '17. 6 ~ 7월

3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예산제 추진

지난 5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 강화

□ 추진방향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고 사업제안 주체를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
- 先 예산교육 後 위원추첨으로 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개방성 강화
- 市 전체예산 편성, 결산, 예산낭비 등 시 주요 재정분야로 참여영역 확대

□ 운영개요

- 사업규모 : 연간 500억원(시정참여형 350억원, 지역형 150억원)
- 사업선정 방식
 - 시정 10대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에서 숙의·공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참여예산위원(40%) + 시민 엠보팅(40%) + 예산학교 회원(20%)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 결정

□ 운영성과와 개선과제

- [운영성과] 행정의 재정 투명성 향상과 시민의 자치 역량 제고
 - 예산편성에 시민참여 도입하여 예산 투명성 증대 및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 주민참여예산 참여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정 관심도 제고
- [개선과제] 사업 품질 제고방안 및 시 주요재정분야 참여 확대 필요
 -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화 부족으로 사업 품질 향상 제고 필요
 - 시민의 참여가 사업선정에 국한되어 예산낭비감시 등 재정분야 참여 미흡

□ 중점 추진내용

① 주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기존의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대 개편
 - 주민참여예산[기획조정실] :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 협치예산*[서울혁신기획관] : 사업의 전과정에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
 - *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계획 사업[지역공동체담당관] 등
 -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 추진과정상 공동추진 가능절차는 함께 추진하고 사업특성상 분리가 필요한 경우 투트랙으로 별도 기준·절차를 마련해 운영

②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심사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신설·운영
 - 참여예산위원만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숙의·공론 절차 강화
- 제안자로 ‘단체’를 추가하여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양질의 사업 발굴
 - 개인 외에 단체도 사업제안 자격을 부여하여 사업제안의 양적·질적 제고

③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는 기회 확대

- ‘예산학교 회원제’를 도입하여, 원하는 시민 누구나 예산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수자는 ‘예산학교 회원’ 자격 취득
 - 예산학교 이수자에게 위원 피추첨 자격을 부여하는 “예산학교 회원제” 실시
 -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식을 先추첨 後교육 → 先교육 後추첨 방식으로 변경

4 시민참여를 市 재정운용 영역으로 확장

- 기존 참여예산 편성 외에 주요 재정분야 전반으로 시민참여 영역 확장
 - 전체 예산편성, 결산, 예산낭비 등 市 주요 재정분야별로 참여영역 확장
- 재정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으로 재정 투명성 강화
 - 재정정보포털 시스템을 시민이 알기 쉽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재정정보 공개

5 자치구 참여예산제 활성화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로 사업품질 향상
 - 상위 7개 자치구 5.5억원 / 중위 11개 자치구 5억원 / 하위 7개 자치구 4.5억원 지원
 - 지원요청사업 적격심사후 부적격사업을 제외하고 적격사업으로 대체
 - 자치구 선택에 따라 기존 참여예산사업을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통합 추진하는 경우, 참여예산지원액(5억원)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사용 가능
- *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한 區단위 계획으로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추진
- '16년 시범운영한 동 지역회의사업(25억원)은 사업효율성 제고 및 주민 혼선 방지를 위해 마을계획사업*에 통합 운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하나로서 마을주민 공동으로 지역필요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추진

□ 추진일정

- 참여예산 사업 공고 및 제안 접수 : '17. 2 ~ 4월
- 참여예산위원 추천 및 위촉식 : '17. 4월
-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재정참여 활동 : '17. 5 ~ 10월
-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사업 확정 : '17. 9월초

4 '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

시민안전, 복지 등 시정 역점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금 추가 확보를 지속 추진하여 시 재정건전성 제고

□ 추진배경

- 보육지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등적 보조비율 적용으로 시 재정부담 가중
 - 국비 매칭 79개 복지사업으로 연 1조 3,450억원 시비 부담('16년 기준)
 - 차등보조에 따른 105개 사업 연 1조 4,354억원 추가 부담('16년 기준)
- 도시안전, 도시재생, 시민복지, 일자리창출 등 대단위 투자가 필요한 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 자원 확보 필요

□ 추진방향

- 서울시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국비지원 법규정 미비 등 불합리한 지방 재정지원제도 개선과 국가정책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 지원 지속 요구
- 시 역점사업, 중앙부처 연계 사업 등 국비확보 가능성이 높은 대상사업 적극 발굴 및 전략적 핵심사업 중점관리 등 단계별 체계적 대응

□ 그간 추진실적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 국고보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 '17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대상사업·핵심사업 발굴 및 확보 추진
 - 정당 예산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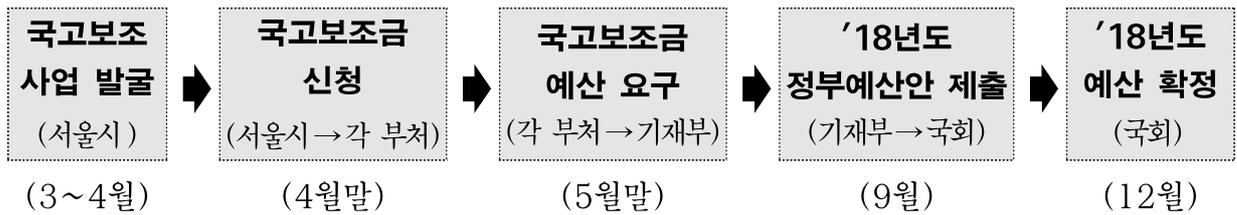
※ 최근 5년간 국비 추가 확보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 업 수	5개	7개	13개	14개	29개
예 산 액	190	813	803	1,103	827

□ 중점 추진내용

- 전략적 핵심사업 선정 및 체계적 대응으로 국고보조금 확보



① 국비추가확보 대상사업 발굴·선정

- 市 역점사업,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 대단위 투자 신규사업 등 국비 추가확보 대상사업을 발굴 후 전략적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중점관리

② 정부예산안 및 국회예산심의 시 추가 확보 활동 추진

- [對 정부] 사업 소관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방문 정부예산안 반영 활동
 - － 해당 사업별 소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방문을 통해 국비 지원 필요성 설명 등
- [對 국회] 정부예산안 미반영시 국회를 통한 반영 활동
 - － 국회 주요 상임위, 예결위 위원 방문을 통한 국비 사업 타당성 등 설명 등

③ 국고보조 차별 개선 추진

-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폐지하여 재정적 차별 개선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차등보조율 근거 개정 추진(규정 삭제)
- 국회 상임위, 기획재정부 대상 개선 건의 추진

□ 추진일정

- 20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계획 수립 : '17. 2월
- 20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사업발굴 및 선정 : '17. 4월
- 국고보조금 신청 등 정부예산 반영활동 추진 : '17. 4월~

5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실효성 강화

□ 사업개요

- 대 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일반투자 사업,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재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심의(외부 12, 내부 3)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16년도 투자심사 현황 : 총 6회(정기 4·수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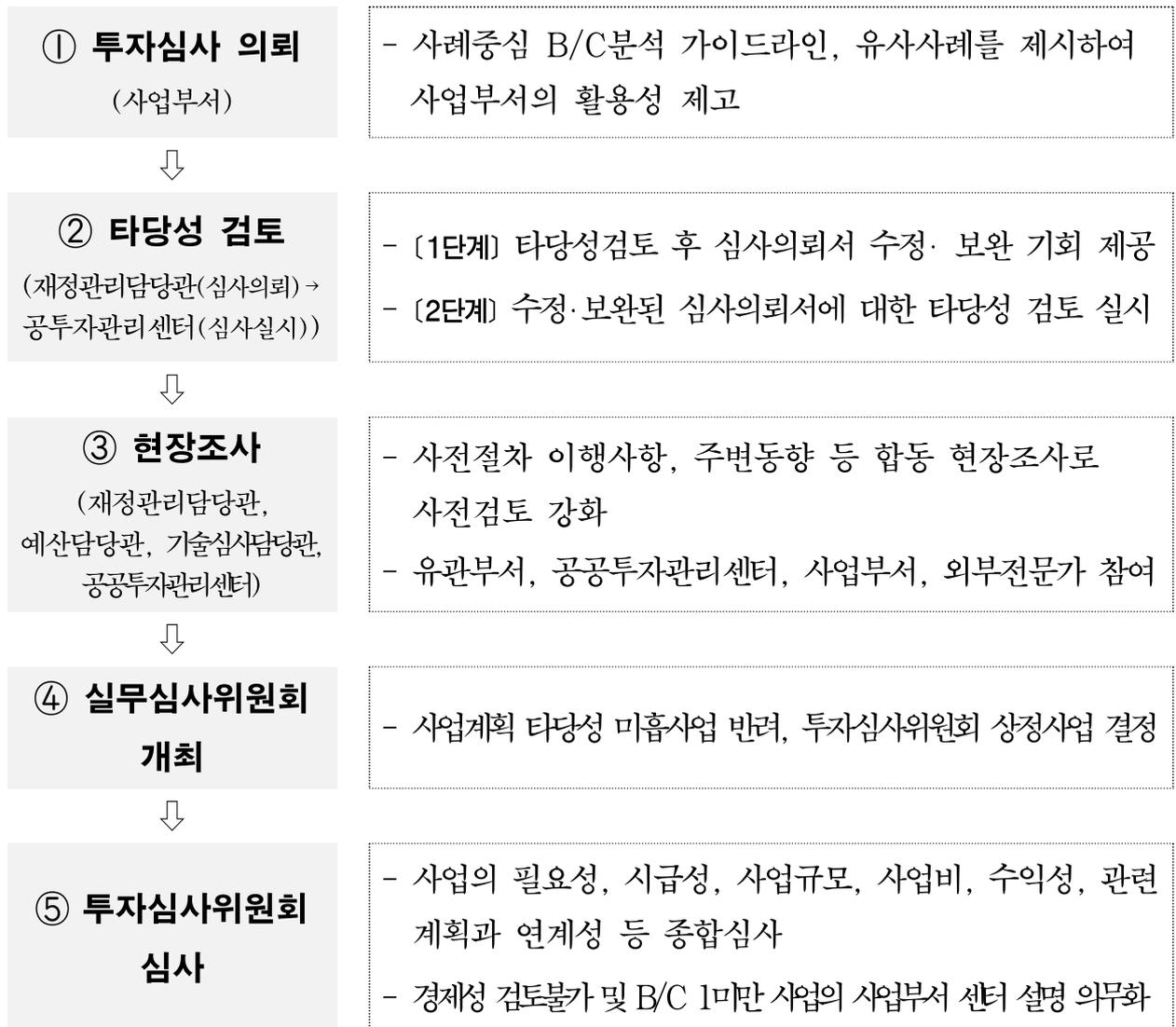
(단위 : 건, 억원)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철 회		반 려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203	52,194	16	3,234	106	25,457	19	3,756	45	12,519	17	7,228

□ 중점 추진내용

- 투자심사 전 반려 근거 구체화('16.3~)
 - 사업 추진시기·규모,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직전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16.6~)
 - [기존]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개선] 총사업비 3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개선
 - [기존] 市 출연금 7억으로 진행되는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공투가 선정
 - [개선]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市가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 투자심사 단계별 심사 개선방안('16.3~) 내실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관리 강화

-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및 공사 진도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추진일정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 : '17. 1 ~ 5월
* 투자심사 전 반려근거 명확화,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 '17. 2 ~ 5월

6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쏠 과정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추진방향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가칭)’ 구축으로 보조사업 관리 쏠과정 체계화
-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역량 집중과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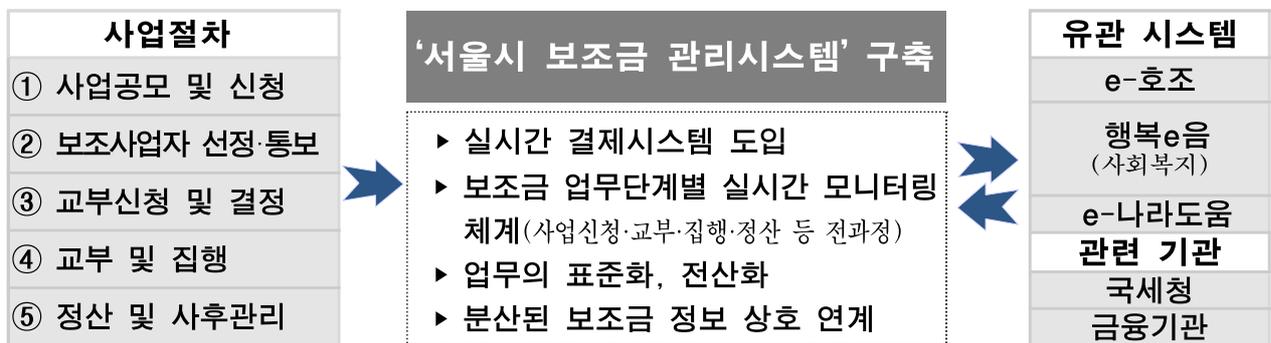
□ 추진배경

- ‘17년도 기준 市 전체 보조사업은 총 1,281건, 7조 1,092억원
 - 공공단체 보조사업 : 878건(68.5%) / 5조 6,688억원(79.7%) 규모
 - 민간보조사업 : 403건(31.5%) / 1조 4,404억원(20.3%) 규모
- 관리·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적 관리 필요
- 현 운영 시스템 ‘위드우리(With Woori)*’의 기술적 한계 보완 필요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조 사업 집행 쏠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 시스템 불안정, 잦은 오류, 활용도 미흡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비효율 초래

* With Woori : 서울시-시금고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사비보조금 관리 시스템(‘14.4~)

□ 중점 추진내용

①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가칭)’ 구축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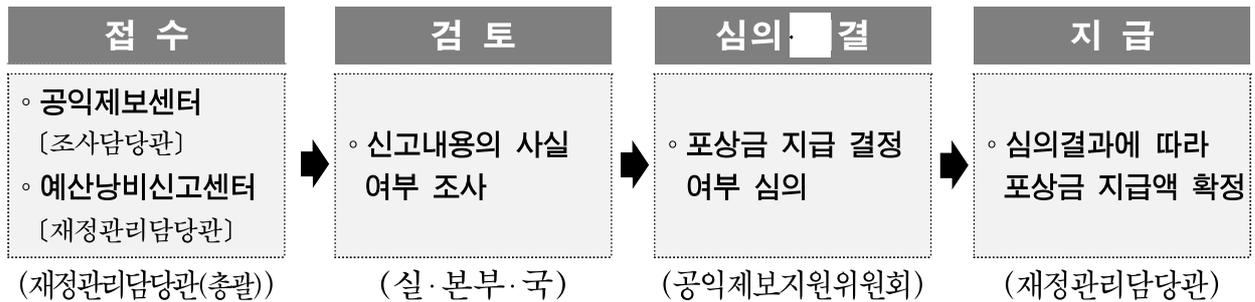


- 보조금사업 업무분석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17~'18, 1단계)
 - 실시간 결제 및 모니터링 기능 도입 사업신청·교부·집행·정산을 일괄 관리
- 구축된 관리시스템과 유관기관 시스템과 상호 연계 추진('19, 2단계)
 - 사업별 유사·중복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2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시민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

- 개 요
 - 도입배경 :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16.9)
 - 내 용 :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 지급범위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예산 범위 내)

○ 운영체계



□ 추진일정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가칭) 구축 사업 추진 : '17. 3월~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가칭) 구축 사업 계획 수립('17.3)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17.4~10)
 - 기존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통합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17. 11~)
 - 관리시스템 1단계/2단계 개발사업 추진('18/'19)
- 신고포상금제도 본격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지속추진 : '17. 3월
 -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 보조금 비리신고센터 운영 홍보활동 전개 : '17. 3월

7

서울형 투자·출연기관 경영모델 정립

비용절감을 강조하는 경영풍토에서 공기업의 공공성·사회적책임 강화, 노동존중 노사관계 확립 등으로 새로운 서울형 경영패러다임 정립

추진방향 : 서울형 투자·출연기관 경영모델 정립

	현행	개선				
가치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효율성 중심경영 근로자를 비용요인으로 접근하는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확보 노동존중 관점의 노사관계 지향 				
리스크관리	<table border="1"> <tr> <td>재무 건전성</td> <td>비용절감 방법에 집착</td> </tr> <tr> <td>안전 청렴</td> <td>유사 사건·사고 반복적 발생</td> </tr> </table>	재무 건전성	비용절감 방법에 집착	안전 청렴	유사 사건·사고 반복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 안전·청렴 제도 정비 및 상시점검 확행
재무 건전성	비용절감 방법에 집착					
안전 청렴	유사 사건·사고 반복적 발생					

중점 추진내용

1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

○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 유도

– 동반성장 :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활성화 등

* 성과공유제 도입('17.1~ , 3개 서울시 투자기관 대상)

: 신기술개발·성능개선 등 약속한 목표달성 시 장기계약 구매물량 확대 등 성과 공유 (전동차 부품 공동연구개발(도시철도공사), 전원 공급기 국산화(메트로) 등)

– 공정거래 : 하청·용역 등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 임대제도 확립

○ 세대간 상생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16년 목표 3,988명 / 실적 4,273명 (+ 285) ▶ '17년 목표 3,128명 + (연중 추가 창출)

– 노사정 서울협약('15.12) 이행 실적관리 및 신규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청년의무 고용준수(3% 이상) 지속 추진 ※ '16년 : 1,519명(정원대비 7.2%) 고용

– 기관의 고유사업중 장애인 고용 적합 업무 발굴 등을 통한 채용확대 추진

② 노동존중 경영 강화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확산

- 2개 시범기관(서울의료원, 신용보증재단) '근로시간 단축' 우선 도입('17.1~)
 - ▶ 추가 인력 투입 후 노동시간 단축 유도, 이후 검증·보완

기 관 명	추가인력투입(총87명)	근로시간단축(1,800시간대)
서울의료원	60명 ('17~'20년, 4년간 연차별 증원)	2,485→1,888시간 ('17~'22년)
신용보증재단	27명 ('17~'20년, 4년간 연차별 증원)	2,275→1,815시간 ('17~'22년)

- 쏠 기관 '자율적 시간외·휴일근무 감축운동' 전개

○ 근로자이사제 조기 안착, 근로자간 차별해소를 통해 근로자 경영참여 활성화

- 근로자이사제 도입 완료(13개 대상기관) 및 근로자이사 경영교육 지원
- 비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자(공무직,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위한 지원 강화

③ 재정, 안전 및 청렴 리스크 관리 강화

○ 재정 리스크 관리 강화

- 투자기관 : 안전 재원확보, 사업구조개선 등 기관별 재정관리 시스템 마련
- 출연기관 :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강화, 집행단계 적정·적시성 강화
- 전 기 관 : 부가세 환급(매입세액공제) 관련 교육 및 점검 강화

○ 안전·청렴 리스크 관리 강화

- 기관별 사전예방적 제도 마련, 상시점검여부 등 안전·청렴분야 평가 강화

④ 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강화

- 설립(예정)기관 : 체계적 기관운영을 위한 '제 규정 표준안 및 업무매뉴얼' 마련
- 설립준비기관 : 타당성 검토 및 검증절차를 거쳐 설립토록 지원체계 마련

□ 추진일정

-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1~3월
- 단위사업별 이행실적 정기·수시평가 및 포상실시 : '17년 연중

8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市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기여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16년 경영평가 결과 ※ 평가대상 : '15년 실적

- 투자기관 : 5개 기관(도철·시설·농수산·SH공사 '나'등급 / 메트로 '라'등급)
- 출자·출연기관 : 13개 기관('가'등급 2, '나'등급 5, '다'등급 6개 기관)

대상기관	서울 의료원	서울 연구원	산업 진흥원	신용 보증	세종 문화	여성 가족	복지 재단	문화 재단	시립 교향	자원 봉사	디자인 재단	장학 재단	관광 마케팅
13개 기관	나	나	가	다	다	나	다	나	다	다	가	다	나

□ 중점 추진내용

- 평가기간 : '17. 3 ~ 8월
- 평가주체 : 행정자치부(5개 투자기관), 서울특별시(13개 출자·출연기관)
- 평가내용 : 리더십, 경영전략·시스템, 경영(사업) 성과, 정책준수 등
 - '안전·청렴' 평가 강화 : [투자] 7점 → 10점, [출연] 2점 → 7점
 - 사업지표 목표치 상향(기준값의 110% → 120~140%), 사후관리 평가지표 신설 등
- 결과활용 : 사장 및 임직원 성과급 차등지급,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34백만원 ※ 예산사업명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 추진일정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17. 3 ~ 6월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대상기관, 주관부서, 행자부 등) : '17. 7 ~ 8월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①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강화

②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

③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④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제고

1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강화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체감형 협력사업 발굴·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상생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지역간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 및 관계 구축
- 도농간 먹거리, 일자리 교류 등 시민체감형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속 확대

□ 사업개요

- 서울과 지역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공동체 구성
 -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과의 협력 기반 구축
 - 지역 상생공동체 구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협력사업 발굴·확대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상생교류 사업단」 운영
 - 상생교류사업에 대한 민-관협치 강화 및 컨설팅 기능 지원
 - 상생교류분야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원 조사 및 정보제공
- 소요예산 : 총 670백만원
 - ※ 예산사업명 :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96백만원),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574백만원)

□ 중점 추진내용

① 상생교류사업 발굴·확대

-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우호교류협약 체결」 추진
 - 기초지자체와 교류확대로 먹거리·관광 등 주민 체감형 상생교류사업 발굴

〈 '16~17년 서울시 우호교류협약체결 현황 〉

- ▶ 광역(1) : 세종특별자치시
- ▶ 기초(10) : 안동시, 양평군, 전주시, 가평군, 창녕군, 영동군, 보은군, 삼척시, 광주광역시('17), 상주시('17)

※ 전체 : 총 42개소 광역 12, 기초 30)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류 확대**

- 지역 수요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 지자체 수요 중심 맞춤형 연계협력사업 지속발굴(연중) 및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 ▶ '17년 신규 협력사업 추진 : 농번기 도농일자리 교류(일손뱅크), 지역소농생산자 판로지원 등
- 지역자원 조사수집을 통한 신규 교류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과의 접목 도모

2 상생교류사업 내실화 추진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강화**

- 지역상생 교류사업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6개 사업 예정)
- 지역상생발전 방안 모색 위한 지자체와 전문가 참여 「'17 지역상생포럼」 개최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지역 상생교류 사업단」 운영('16.5.2.~)**
 - 지역상생 민·관협력세미나(1회), 권역별 협의회(5회) 개최
 - 지역 홍보 및 특산물 등 판매공간 운영(청계광장 4회, 시민청 8회),
 - 지역자원 및 정보 조사(연중) → 도농일자리교류, 지역 소농생산자 판로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
- ▶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계협력을 위한 박람회(10월), 포럼 및 세미나(11월) 개최**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간 상생방안 발굴 및 정책, 사업계획 등 발표·논의
 - 우호교류협약 체결 자치단체 관계자 및 지역전문가 100여명 참여

○ **지역과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생 행사 운영**

- 지역상생사업 필요성 등 시민 공감대 확산 위한 「'17 지역상생박람회」 개최
- 지역 축제·관광·산업 등 홍보 행사의 전시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 특산물 및 가공품 판매 행사 장소 확대(청계광장, 도심공원 등)

□ 추진일정

- 지역상생 시행계획 수립 : '17. 2월
-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지역교류 전문가 자문회의 등 : '17. 2월~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개최 : '17. 9월

2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

혁신, 기후변화대응, 전자정부 등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투자유치·관광 등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도시외교 강화

□ 추진방향

- 국제회의 개최 및 주도적 참여를 통해 서울시 우수사례를 세계와 공유
- 유력인사 초청 및 전략적 해외순방으로 서울시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 그간 추진실적

- 5개 도시 우호도시 신규체결 ※ 총 5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 체결
 - － 콜롬보(스리랑카, '16.6), 웰링턴(뉴질랜드, '16.7), 카트만두(네팔, '16.9), 반둥(인도네시아, '16.10), 호치민(베트남, '16.10)
- 서울시 대표단 전략적 해외순방 추진(총 3회 순방)
 - － 서울시 정책사례 발표를 위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16.1)
 - － 방콕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계도시정상회의(WCS ; World Cities Summit) 참가를 위한 동남아(방콕, 싱가포르) 방문('16.7)
 - －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40주년 행사와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총회 참석 위한 북미(뉴욕, 몬트리올) 방문('16.9)
- 해외 국민 서울시 방문 추진(총 6회 방문)
 - － 인도네시아 대통령(조코 위도도), 몽골 대통령(차히아 엘벡도르지)('16.5)
 - － 스위스 대통령(요한 슈나이더 암만)('16.7)
 - － 네덜란드 총리(마크 뢰터)('16.9)
 - － 코스타리카 대통령(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리베라), 덴마크 총리(라르스 뢰케 라스무센)('16.10)

□ 중점 추진내용

① 국제회의 개최 및 외빈 초청으로 글로벌 소통강화

- 서울 도시정책공유 시장회의(Seoul Urban Solution Summit)를 신설하여 서울 아젠다 공유·확산
 - 혁신, 기후변화대응, 전자정부, 사회적경제 등 서울시 우수사례 홍보·공유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OECD 포용성장 컨퍼런스 등과 연계·개최('17.10)
- 자매우호도시 시장 초청 등 국제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상파울루 시장('17.4), 베이징 시장('17.11) 등을 초청하여 우호협력 강화
 - 親서울 국내·외 인사를 포함한 '서울클럽' 총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우수정책 공유('17.9)

②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해외순방 추진

- 율리아노브스크, 모스크바 등 러시아 주요도시와 정책교류 강화('17.6~7)
 - 제4회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총회, 모스크바 도시 포럼 참석 등 정책 교류 추진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본(독일)) 및 시티넷 총회(콜롬보(스리랑카)) 참석('17.11)
 - 델리광역시(인도)와의 연계 협력 강화

③ 시민에게 자매우호도시 문화체험기회 제공

- 지구촌 나눔한마당 개최로 시민의 글로벌 문화 체험기회 확대('17.5)
 - 기획단계부터 문화예술과 협업 T/F 구성 및 전문가 자문 등 축제 전문성 강화
 - 글로벌 대표축제로서 세계의 맛·멋·나눔이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 해외국가·도시의 날 개최
 - 해외문화를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해당국가·도시와의 문화교류 강화
 - EU의 날('17.6), 태국·캐나다의 날('17.7), 아세안의 날('17.9), 중국의 날('17.10)

3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유관기관, 민간기업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공유 및 서울형 정책모델 해외진출 사업의 실행력 강화

추진방향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과 '서울시 정책수출단'을 온·오프라인 정책수출 기반으로 활용하여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확대

사업개요

- 개도국 맞춤형 정책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외홍보 추진
 - 핵심정책 콘텐츠 개발 및 대상 도시별 맞춤형 패키지 상품화
 - 해외 현지 워크숍, 국제행사 참가, 언론 홍보 등 정책 마케팅 다변화
- 해외도시 정책공유, 사전 컨설팅을 통해 후속사업 개발 및 본사업 수주
 - 온·오프라인 정책공유 활동을 통하여 서울시 정책수출 기반 마련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을 통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민간기업 진출 확대
- 소요예산 : 1,606백만원

※ 예산사업명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행(263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359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984백만원)

그간 추진실적('16~'17.2)

- 해외도시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8개 도시, 8개 사업 수주
 - 도시철도(미얀마 양곤), 빅데이터(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정책자문 수주 5건
 - 도시계획(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등 정책교육 2건, 민간기업 수주 지원 1건
- 서울시 정책공유·사업발굴을 위한 워크숍 및 유관기관 공동행사 추진
 - 하노이('16.4), 반둥('16.11) 등 4개 도시에서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발주처와 스마트시티 세션 공동 개최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교통, 환경, 전자정부 등 서울시 정책설명서 및 홍보책자 제작
 - 정책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아리랑 TV) 및 인포그래픽 활용한 홍보

□ **중점 추진내용**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을 기반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민간기업 진출 확대
 - 공공주도(세무, 소방), 개도국 관심 분야(하수도, 도시개발) 사업 신규 발굴
 - 교통, 철도 등 기 진출분야는 전문가 파견, 협약체결 등 민간기업 진출 기반 마련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정책수출의 허브로 도약
 - 도시간 정책 공유 공간으로 구축하고 우수정책 시상 등 활성화 대책 추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상담 창구 활용
- 서울시 정책 소개 시청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제기구 및 행사에서 홍보
 - 도시계획, 주택 등 서울시 우수정책 온라인 학습프로그램(10개) 제작
 -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콘텐츠 게재 등 국제회의 및 행사 홍보자료로 활용
- ‘17년 정책수출 8개 사업 집중 추진
 - 세무관리시스템 구축(스리랑카 콜롬보) 등 사전 컨설팅 5건, 메트로 운영관리(베트남 호치민) 등 타당성조사 2건, 종합방재센터 구축(방글라데시) 등 본 사업 1건

※ '17년 주요 정책수출 사업계획

■ 추진완료 ■ 추진중 □ '17년 추진(예정)

연 번	사 업 명	추진 단계			
		정책공유	사전컨설팅	타당성조사	본사업
1	종합방재센터 구축 및 역량 강화(방글라데시)				□
2	메트로 운영관리 정책자문(베트남 호치민)	■			
3	버스체계 개편 및 요금징수시스템 구축 자문(인도네시아 반둥)	■			
4	상권분석 컨설팅(부에노스아이레스시)		■		
5	지능형교통시스템 중장기계획 수립(몽골 울란바토르)		■		
6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구축 컨설팅(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 신청)	■			
7	데이터센터 구축 컨설팅(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8	세무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자문(스리랑카 콜롬보)	■			

4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제고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기구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도시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국제기구 유치·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 조성
- 국제기구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어젠다 선도

□ 사업개요

- 국제기구 유치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기구 적극 유치
 - － 국제기구 유치 등에 대한 용역과 전문가 자문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 －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으로 국제기구 유치 추진
- 국제기구간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어젠다 선도 및 우수 정책 공유
 - － 서울시 주도 국제기구간 정보공유 활동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 국제기구간 협업으로 공동 아젠다 발굴 및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 소요예산 : 906백만원 ※ 예산사업명 :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 그간 추진실적('16.1~12)

- 국제아동보호기금(UNICEF) 서울사무소 등 국제기구 유치(2건)
-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위한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개최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29건)
- '유엔-해비타트 III'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정책공유 추진(17건)
-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파견
 -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등 국내소재 기구 10명, UN 해비타트 등 해외소재 기구 4명

□ 중점 추진내용

-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전략 수립
 -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제기구 유치 및 활용 전략 수립
-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으로 국제기구 유치 총력**
 - 국제노동기구 서울직업훈련센터(고용노동부),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외교부), 유엔혁신기구(사회혁신담당관) 등 5개 기구 집중 유치
 - 세계은행 그룹(국제금융공사*/국제투자보증기구*) 서울 연락사무소(기획재정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헌법재판소)유치('17.2월 입주 예정)
 - * 국제금융공사(IFC(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 개도국 민간부문 투자지원
 -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개도국 비상업적 투자위험 보증
- **국제기구간 협업 바탕으로 공동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정책 수출기회 확대**
 - 국제기구와 공동 어젠다 발굴 및 추진 등으로 글로벌 도시로서 역할 강화
- **국제기구간 협업으로 공동어젠다 발굴 및 서울시 우수정책 수출기회 마련**
 - 서울시와 '서울시가 주도하는 4개 국제기구'*간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공동 어젠다 발굴('17.2~)
 - * ① 인간정주관리를 위한 지방정부망(CityNet), ②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③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ICLEI), ④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 국제회의에서 '서울시 정책공유 세션'을 공동 구성하여 서울시의 우수정책 수출 기회 마련
 - ▶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 총회('17.6월, 캐나다 몬트리올)
 - ▶ 시티넷(CityNet) 제8차 총회('17.11월, 스리랑카 콜롬보)

별첨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관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9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94	47	43	4	-
	시정· 처리요구사항	47	12	34	1	-
	건의 사항	18	6	9	3	-
	기타(자료제출 등)	29	29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과 달리 20% 정도는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투자심사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검토불가’ 사업은 ‘분석방법 부재’, ‘센터 검토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되고 있음 ○ '16.3월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심사시 경제성분석(B/C)외에 사업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재원사업의 위험요인 등을 종합 분석 실시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미흡한 ‘부적정’ 사업은 위원회 상정 前 반려 ○ 투자심사위원회시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불가’ 사업이 통과되는 경우 조건부, 2단계심사 등의 조건을 명기하고, 사후에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한 권고사항 부기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건을 단서 명기 -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미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실시실계 전 다시 한번 ‘2단계심사’를 받는 조건을 별도 명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불가’ 의견의 구체적 제시를 통해, 이후 투자심사 진행시 해당사업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 추진 적정성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정 사업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겠음 <p>※ 공투센터 ‘검토불가’ 의견 구체화 유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부서가 제출한 계획 상 경제성 분석 관련 지표가 미흡하여 경제성 분석 등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경제성 분석 미흡 ② 수요·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 경제성 분석 한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현행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1조 400억원임. 따라서 소관 부서의 인력 규모로는 많은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고, 형식상 외부 회계감사도 실효성이 없음. 실효성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라며, 일반기업과 공기업 회계는 다른 점을 감안, 통일된 시차원의 회계감사 지침 및 정산 메뉴얼을 만들고 회계사들에게 숙지시켜 효율적인 민간위탁 업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대상확대를 통한 민간위탁금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대상 확대(연 사업비 10억원 이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 감사수수료 절감 및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통합 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이미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제외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 사용금지) 검토 등 이행감사 실시 ○ 민간위탁사무 공통 및 분야별 회계기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유형(시설형·사무형·수익창출형), 분야별(사회복지·청소년 등) 특성에 따라 목별 단가, 집행 및 정산세부 절차 등 세부 기준 확립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통합 발주 및 시행 : '17.1 ~ 3월말 ○ 민간위탁 공통 및 분야별 회계기준 수립 : '17.2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 의견청취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행정감사 결과, 대부분의 투자, 출연 기관 등의 재무제표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되고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게 하고, 매입세액에 신경을 써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음. 향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처럼 부가세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총괄 : 공기업담당관, 협조 :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① 투자·출연기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요청(반기별)(세제과) - 매출세금계산서 확인, 공제대상 매입세액 목록 등 자료 수합 및 부가가치세 신고</p> <p>②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누락 등 통합관리(연중)(세제과)</p> <p>③ 투출기관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정기교육 시행(연2회)(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투출기관 소통협력 회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철저 강조 [공기업담당관] : '17. 3월</p> <p>○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매입세액 공제현황 등 합동점검 추진 [공기업담당관, 세제과] : '17년 상반기</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립대 운영과 관련,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짝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남학생 휴게실 설치 민원이 있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람 (시립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재정지원 및 운영 》</p> <p>○ '17년 시립대 운영 지원예산 대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498억원 → '17년 735억원 (237억원 증가)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기숙사 증축, 도서관 리모델링,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시립대 교육·연구 분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대폭 확대 <p>《 남학생 휴게실 설치 》</p> <p>○ 총학생회 요청에 따라 학생회관 2층에 남학생 휴게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동아리 재등록 심사 결과에 따라 학생회관 2층에 상주하고 있는 2개 동아리를 3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동아리방을 리모델링하여 남학생 휴게실 설치 추진 - 남학생 휴게실 리모델링 완료('17.1.23~2.3)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지속 발굴·시행 추진</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보다 더 비싼 이율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민간투자업체에게 이율을 보장해 줌으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음. 서울시 채무가 3조2천억으로 15%이고, 행자부가 25%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인프라 시설 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임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잘 파악하여 타당성 및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하고 특히 블루스퀘어 민간투자의 경우 반드시 타당성 여부를 고민해볼 것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타당성 검증절차 및 협약제도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요금 최초결정 및 운영중 요금 인상시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 시행('12.3)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운영을 통해 민간제안서 사전 타당성검토 및 실시협약 사전검증 절차 강화('12.5) - 협약 체결 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협약 사전예고 시행('16.1) ○ 블루스퀘어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절차에 의해 조건부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2월 타당성조사 실시(B/C 1.02, NPV 1,786백만원) 후 '08.1~2월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11.11월부터 개관·운영중 - 아울러 매년 운영실적(매출, 공연장가동률, 회계감사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 및 현장점검 시행 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과 협업하여 민자협상 지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및 재원조달 금리를 최소화하도록 협약체결 유도 ○ 특히 대표적 민자추진 사업 분야인 경전철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와 협업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17.1~12)」을 통해 재정전환 가능성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의 투자 출연기관의 직책 수당 등 보수규정이 각 기관마다 차이가 현저함. 각 기관마다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규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일관되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관별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집행 ○ 문제점 :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는 인건비성 경비(복리후생비)로 기관의 임금체계(기본급, 성과급, 부가급여 등)에 따라 운영된 제도로 일률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 : 임금체계개편 등 논의 시 반영 - 출연기관 :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통제·심의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 '17. 2 ~ 10월(예정)
<p>○ 서울시립대의 여러가지 환경과 입지를 본다면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청의 협조를 구하고,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시립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캠퍼스타운 프로그램형 사업 공모 시 동대문구청과 공동 제안서 제출 결과 2단계 대상사업('18~)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사업 주요내용(사업명 : 청년 UP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공 융복합 연계를 통한 창업 프로젝트 ▶ 청년전문가와 지역 청년창업지원자가 함께하는 지역기반 창업 및 공공서비스 창업 프로젝트 ▶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복합공간 건립을 통한 24시간 창업활동 및 주거안정화 지원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2단계 추진일정에 따라 관련 학과(도시공학과) 및 자치구(동대문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보완과정을 거쳐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평생교육원의 개설 강좌들이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강좌들과 차별성이 거의 없음. 강좌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질을 높이고, 충분한 홍보를 한다면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임</p> <p>평생교육원 운영과 강좌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평생교육원이 시립대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강좌가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람 (시립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전문성강화와 창업·창직 등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반교양뿐만 아니라 전문교육과정(자격증취득) 강좌 개발 ○ 서울 유일의 종합공립대학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문교양 중심의 공개특강 기획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연계 대학연계 시민대학 - 시립대 특화교양과정 - 동대문구청 연계 동대문구 다산 아카데미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봄학기 운영을 위한 강좌 개발 : '17. 1월 중순 ○ 공개특강과정 세부강의계획 수립 : '17. 1 ~ 2월 ○ 2017 봄학기 운영과정 전체 홍보 : '17. 2월 중순 ○ 일반교양 및 전문교육과정 개강 : '17. 3월 초 ○ 공개특강과정 개강 : '17. 3월말~4월초
<p>○ 보건대학원 설립을 위해 특수 대학원의 정원까지 줄였는데, 결과적으로 교육부로부터 보건 대학원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였음. 시립병원 운영과 메르스 같은 사회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대학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시립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총 6회) 도시보건대학원 추진계획 확정 및 교육부 제출('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국회 관계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추진(총 7회) - 교육부 도시보건대학원 증원 불허 통보('16.1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와 협력강화, 학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건대학원 설립 재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립대 학생들이 시설보수나 수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도 즉각적인 수리가 되지 않고 있음. 빠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시립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업체를 활용하여 신속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요구사항에 대해 연간단가계약 업체를 활용하여 학생들 불편사항 해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보수업체를 선정('17.3월중)하여 학생들의 시설보수나 수선 요구가 있는 경우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도서관 전체 예산 36억중 학술 전자정보자료나 국내연구역량에 20억이 사용되고 있어 실제 도서관운영에는 16억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학생들이 도서관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기숙사의 경우 예산은 있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 적절한 예산배정으로 내부 구성원부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시립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증축을 통한 학생 주거복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17. 3월 ~ '18. 8월 - 사업내용 : 100실, 300명 수용 ※ 기숙사 수용률 : 현재 7.8% → 증축 완료시 10% - 소요예산 : 159억원 ('17년 75억원 지원 확정) ○ 예산배정의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대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형평성 제고 - 시립대 내부의 각종 의견수렴 절차(교무위원회, 예산위원회, 예산실무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학협의회 등)를 거쳐 구성원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 도서관 전체예산 36억원 중 30억원은 학술·일반도서, 전자정보자료 등 자료구입비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중 전자자료 구입비 및 국외정기간행물 예산 21억원은 학생과 교수의 학습·연구 역량 강화와 직결되어 도서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해외 전자정보자료 구독비는 매년 상승폭이 커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자료구입비 외 예산 6억원은 도서관의 비품 구입비,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되며 자산취득비로 노후화 비품 교체 적극 추진 예정 ○ 그 외 도서관 예산과 별도로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환경개선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후화된 중앙도서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내용 : 방화문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 ▶ 공사기간 : '16.12.26 ~ '17.2.17 ▶ 소요예산 : 657,000천원 - '17년 중앙도서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연구원의 경우 정원과 관련, 청사관리 등 현업직의 경우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및 사업소, 산하기관 등 인력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통일된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총괄 : 공기업담당관, 협조 : 조직담당관,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서울시 및 사업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및 사업소의 청사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p>《 산하기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기관의 청사관리 등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통하여 정원과 별도 관리 ○ 또한, 투자·출연기관의 통일된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별도 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실시 : '16. 9.30 ~ 12.13 - 대상기관 : 19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포함 - 용역결과 : 기관별 개선안 제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원칙】 총인건비등 재정부담 최소한으로 '유사업무 통합·일반직화'로 근본적 차별 해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안전】 ㉠외주화 타당성 검토(정규직화) ㉡장시간 근로, 유해위험업무 개선안 마련 2. 【인사 승진】 ㉠정규직 직급체계에 편입(승진가능성 보장) ㉡휴가휴게시간 보장 3. 【임금제도】 ㉠생활임금 적용 ㉡장기근속수당 신설 ㉢평가(성과)등 동등 적용 4. 【복리후생】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유급병가제도 ㉢복지포인트 등 신설 5. 【노사관계】 ㉠노사소통활성화, 노사협의회운영 등 노동법 준수기준 가이드라이제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내용 : 기관별 실행계획 보고회('17.1.11) ※ 서울연구원은 별도 TF 구성하여 현업직을 정원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중('17.2월 현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실행계획 정기점검 : 연 3회(4/7/1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평가제도는 엉망이다'라고 평가되어 있음. 공기업 평가관련 상대평가로 인한 점수 하락화로 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숙사건도 있었고 연봉제와 상대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산하 기관에 대한 상대평가 시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제도의 활성화와 부분수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17년 경영평가 편람 수립 시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피평가기관이 경영평가(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영</p> <p>▶ 경영평가지표 :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 (2점)</p> <p>▶ 주요내용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세월호, 구제역 등 유사사항 관련 시간외 수당 지급 등, 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제외한다.</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달은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나 심리상담소인 힐링센터의 경우, 업무시간 중 이용하는 것은 동료들의 시선 등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심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점 등을 감안, 보다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 서울심리센터의 지원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보건의료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현황(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심리지원센터(송파구 충민로) - 서울심리지원 북부센터(도봉구 삼양로)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직원이용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직원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이 방문접수를 기피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화접수 후 심리 검사지를 우편으로 수령·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이후 심층 상담을 위해 직접 심리지원센터 방문(방문 최소화)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심리지원센터 이용 절차 》 ※ 무료이용</p> <p>① 접수(전화 또는 방문) → ② 상담 및 심리검사 → ③ 맞춤형 서비스 제공(심리치료,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p>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리플렛’ 제작하여 청사 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 - 행정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홍보문안’ 게재(’17.3월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민원과 관련된 자료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민원세부내용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민원 관련 자료는 요약형식이 아닌 민원유형,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 세부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전부서 교육 및 안내 실시('17.2.2)</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향후 시의원 요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제출 시 세부내용까지 작성할 예정이며, 준수여부 관리 철저히 하겠음</p>																																												
<p>○ 중기인력운용 계획서의 내용 중 2014년~2015년 민간위탁이 없다고 제출되었으나 몇 건의 민간위탁이 있었음. 자료제출할 때 계획서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20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시의회 제출('16.12) - 신규 민간위탁 총 10건 반영(시의회 동의 확정 전) 〈'17~'21년 신규 민간위탁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587 1227 1433 1736"> <thead> <tr> <th>시설물 · 업무명</th> <th>사업기간</th> <th>사업비 (백만원)</th> <th>유형</th> </tr> </thead> <tbody> <tr> <td>서울 새사용플라자(가칭)</td> <td>'17.1~</td> <td>2,306</td> <td>시설</td> </tr> <tr> <td>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td> <td>'17.4~</td> <td>344</td> <td>시설</td> </tr> <tr> <td>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운영</td> <td>'17.3~</td> <td>480</td> <td>시설</td> </tr> <tr> <td>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td> <td>'17.1~</td> <td>3,185</td> <td>시설</td> </tr> <tr> <td>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운영</td> <td>'17.4~</td> <td>150</td> <td>시설</td> </tr> <tr> <td>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td> <td>'17.1~</td> <td>611</td> <td>사무</td> </tr> <tr> <td>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td> <td>'17.4~</td> <td>330</td> <td>사무</td> </tr> <tr> <td>(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td> <td>'17.2~</td> <td>800</td> <td>사무</td> </tr> <tr> <td>서울혁신센터 사무운영</td> <td>'17.1~</td> <td>3,967</td> <td>사무</td> </tr> <tr> <td>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td> <td>'17.1~</td> <td>539</td> <td>사무</td> </tr> </tbody> </table>	시설물 · 업무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유형	서울 새사용플라자(가칭)	'17.1~	2,306	시설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	'17.4~	344	시설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17.3~	480	시설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17.1~	3,185	시설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운영	'17.4~	150	시설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	'17.1~	611	사무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7.4~	330	사무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17.2~	800	사무	서울혁신센터 사무운영	'17.1~	3,967	사무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17.1~	539	사무
시설물 · 업무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유형																																										
서울 새사용플라자(가칭)	'17.1~	2,306	시설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	'17.4~	344	시설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17.3~	480	시설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17.1~	3,185	시설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운영	'17.4~	150	시설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	'17.1~	611	사무																																										
은평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7.4~	330	사무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운영	'17.2~	800	사무																																										
서울혁신센터 사무운영	'17.1~	3,967	사무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17.1~	539	사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이나 재계약시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민간위탁기관에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의 고용유지·승계 ‘노력’ 규정을 ‘의무’로 강화(’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80% 이상 의무화 명시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표준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p> <p>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 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인사분야의 총괄적 기준 정립을 위한 「민간위탁 분야 근로자 노동권리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반영 - 노동권리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 ’17.3 ~ 8월
<p>○ 민간위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부정비리가 적발되는 수탁기관이 있으며 서약서 양식 등이 불일치 됨. 수탁기관 선정 시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16.8 개정)을 통한 민간위탁 사무 추진 관련 통일된 업무처리지침 마련 - 민간위탁 개념, 추진절차, 수탁자 선정기준, 표준협약서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의 내용·단계별 세분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에 반영(’17.2~4월) ○ 민간위탁 공통 및 분야별 회계기준 수립(’17.2~8월) ○ 민간위탁 인사분야의 총괄적 기준 정립을 위한 「민간위탁 분야 근로자 노동권리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하여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반영(’17.3~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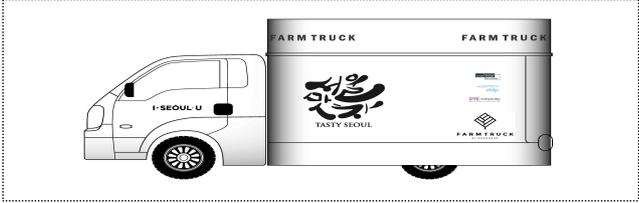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부실하다고 판단됨. 수탁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점검 매뉴얼 수립과 관행적인 재계약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수탁기관이 특정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16.8)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점검 매뉴얼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 등을 통해 주요 의무불이행 사례를 수집·유형화하여 협약 불이행의 내용·단계별 세분화된 제재조치 기준 수립(’17.2~4월) - 민간위탁 공통 및 분야별 회계기준 수립하여 민간위탁 회계 점검 매뉴얼 마련(’17.2~8월) ○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검토(’17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정하고(3년 이내, 1회만 재계약 허용), 기한 초과 시 해당사무에 대해 지자체 직접추진, 산하기관 고유사무 전환, 현행 유지 여부 등 원점에서 재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소관위원회 회의록 제출 현황을 보면, 관례상 위원들의 이름을 지우고 있음. 시의회 제출자료에도 익명으로 하는 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검토 후, 실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향후 기획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제출하는 서울시 전체 자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을 시달하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요구자료 제출 관련 유의사항 공문 시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준수협조 요청』 (기획담당관-18565, '16.10.24)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획담당관-1793, '17.2.7) <p>○ 시 업무회의시 요구자료 제출 유의사항 전파('17.2.2)</p> <p>○ 주요 안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음 (법제처 질의회신 07-0376, '07.11.21.)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편집 후 제출 필요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행자부 질의회신, '12.1.19) ▶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편집 후 제출 필요(행자부 질의회신 '12.3.7)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의원요구자료 제출기한 준수 강조 및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출 유의사항 실·본부·국에 수시 안내(공문 시행 및 업무회의시 수시 전달)</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련, 상대평가제에 대한 서울시 산하기관들 불만이 있음. 대상 기관들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대상기관과 소통을 통하여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17.1 ~ 6월 - 구 성 : 12명(외부전문가 6명, 노사대표, 모델협 등)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협업 공동연구 추진 - 주요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표의 적정성 ▶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체계 개선 ▶ 경영평가 환류 강화방안 등 ○ 추진실적 : 2017.1.6. 1차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제도 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17.1~6) ○ 제도개선건의(행자부 등) 및 개선조치('17.7~)
<p>○ 투자, 출연기관의 직원 내부만족도가 낮은 곳이 시민만족도와 경영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남.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상/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내부만족도 포함)를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16.10/'17.1)하여 기관 자체 개선토록 조치 ○ '17년 내부만족도 조사결과는 '18년 기관장평가(성과급, 연봉인상률)에 반영토록 방침수립('17.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 일몰제에 대한 입법 예고 상태인데 수탁기관의 경우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 위탁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 지자체 직접공급, 산하기관 고유사무 전환, 현행 유지 여부 등 월점에서 재검토 - 현재 ① 민간위탁 적정성 ② 수탁기관 적격성 심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평가위원회 기능을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로 일원화'하여 일몰제 심의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적격성 심의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 ○ 민간위탁 시 3년 이내, 1회만 재계약 가능하도록 원칙 확립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등에서 수의위탁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제외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조례 개정 추진 검토('17년 상반기)
<p>○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자치구별 가중치를 부여(참여율 높은 구는 플러스, 기존에 많이 선정된 구는 마이너스 가중치를 주는 등) 하는 등의 다각적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가 활발한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참여예산제도 활성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 2월 ○ '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17. 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부서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함. 따라서, 민-관 협치뿐만 아니라 관-관 협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기획조정실에서 선도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내부칸막이를 거둬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은 시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부서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내부 칸막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조정, 협치가 필요한 사안은 실·본부·국 요청사항, 시의원 지적사항, 기획조정실 자체 판단 등을 통해 파악하고,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여 해결방안 도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에도 기획조정실 주도로 각 실·본부·국 협업과제 발굴 및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회의 등을 통해 부서간 업무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치를 적극 지원하여 시정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p>○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출하는 융자금이 상위법 및 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상위 기관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 조치를 취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승인이 필요한 공사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채발행운영기준(행자부)'의 사채에 대한 범위가 명확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부 방문, 관련내용 건의 및 협의('16.11.2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지침개정 의견조회시 해당규정 명확화 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함. 공통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만들어진 트럭을 임대하는 방안 포함하여, 김진철 의원님 말씀처럼 임대방식이나 기금을 활용하여 선 제작 후 운영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해주시기 바람. 또한, 트럭만 있다고 곧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업방법, 푸드트럭 디자인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식품안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푸드트럭 브랜드 디자인 개발[서울디자인재단] - 네이밍 [국문] 서울맛차 / [영문] TASTY SEOUL</p>  <p>○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푸드트럭 임대 - '17년 서울형 푸드트럭 운영(DDP내, 운영대수 : 4대) ※ 동대문미래창조재단 기부금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추진 - 식품진흥기금 활용 푸드트럭 리모델링 등 개선자금 융자 -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 운영 곤란</p> <p>○ 음식개발 및 아이디어 개발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푸드트럭 창업자 교육과정에 메뉴 컨셉 및 차별화 방안 등 교육실시</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푸드트럭 활성화 계획 수립 : '17. 2월말</p> <p>○ 푸드트럭 임대 운영실시(야시장과 연계) : '17. 5월~</p> <p>○ 푸드트럭 창업교육 실시 : '17. 3월~</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민참여예산 중 자치구에서 요청한 예산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점검하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사업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자치구 자체 평가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평가 및 집행완료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 2월 ○ '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17. 2월
<p>○ SIFC건물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투자유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G측의 SIFC 매각차익 세금 국내납부 확인공문 수령 ('16.11.22) ○ 제271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완료 ('16.12.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현재의 편리함을 위해 도시인프라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시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총괄적인 대책이 전무함.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상태가 어떠한지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인프라 시설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고 정책에 입안하기 바람 (안전총괄과)</p>	<p>□ 추진상황 : 추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을 추진하였음 ○ 이와함께 ’16.7월 “서울특별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단위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 계획 수립 제도화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 지침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종류의 시설물 별 실태평가에 대한 작성지침 마련 - 실태평가에 따른 종합관리 계획 작성지침 마련 ○ ’18~’19년 14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11개 종류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 ’20년 상반기에 작성된 실태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평가보고서 등 작성지침서 마련” 용역 발주 : ’17.2월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17.3월 ○ 용역 준공 : ’17.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BSC지표가 같은 내용인데 명칭 (표현)만 바꾼 사례가 있음. 제목을 바꿔서 혼동을 주는 것은 문제임. 일관된 지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하여 주기 바람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실적추이 모니터링 등에 혼동이 발생치 않도록 동일 내용의 지표는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혼란 최소화(예정) ※ '17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수립지침 확정 : '17. 2월 ○ 성과관리계획 작성 : '17. 3월 ○ 성과관리계획 검토 및 확정 : '17. 4월 ○ 성과지표 적정성 등 외부평가 : '17. 6월 ○ 상반기 BSC 실적 평가(기관·개인평가 반영) : '17.7 ~ 8월 ○ 하반기 BSC 실적 평가(기관·개인평가 반영) : '17.12~'18.2월
<p>○ 서울시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3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있음. 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 (조례안 검토)하여 혼동을 최소화 하기 바람 (민관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위한 전수조사 실시('1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확대 : 법령·조례상 상설 위원회(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조례상 상설 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변경) ○ 위원회 담당자 대상 전수조사 교육 실시('16.12.27/'17.1.3)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보고 : '17. 6월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행정심판운영개선계획 관련,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데 자치구별 재결 신청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등 재결 신청건수가 많은 자치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를 위한 재결레집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청구 사건 중 유형별 대표적인 재결사례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제기요건, 주택·건축, 도시관리, 교통, 보건·복지·문화, 정보공개 분야 등 ▶ 자치구가 행정처분 시 기준 정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선정 - 2015년 재결레집 제작·배포 : '16.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재결레집 제작·배포 : '17. 2월(예정) ○ 자치구에 주요 행정심판 사례 전파(수시)
<p>○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재정시계 통계 관련 서울시의 여러 가지 분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통계 자료인데 집행률이 잘못되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를 행자부는 13개, 서울시는 11개 분야로 하는 등 상이함. 현황을 파악하여 통일시켜 주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시계 집행률 오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시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데이터를 1일 1회씩 다운받아 집행률을 포출하는 것임 - 프로그램 설계 시 기금을 제외한 예산액을 모수로 집행률을 계산하여 오류발생 - 프로그램 고도화작업을 통하여 조치완료('16.12월말) ○ 행자부 분류체계와 서울시 분류체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13개 기능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비에 한하여 추가로 부문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분류(행자부, 13개분야)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 사업비에 대한 추가작성 부문(서울시, 9개분야) :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문화관광, 도시안전, 일반행정, 예비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 운영과 관련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 시립대와 기획조정실이 함께 조례개정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총괄 : 시립대, 협조 :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검토내용</p> <p>○ 시립대 조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p>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p> <p>「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9조(부설연구소)제1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도시과학연구원 ~ (중략) ~ 14. 도시홍수연구소</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기존 연구소는 연구실적 등 점검을 통해 개선 유도</p> <p>○ 부설 연구소 신설 추진 시, 연구 주제의 시의적절 여부 및 세부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연구소의 남설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연구를 지원하겠음</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민참여예산 중 동 지역회의 예산 편성시 자치구별 형평성을 꼭 고려하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주민참여가 활성화된 자치구 및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되,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구,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 : '17. 2월 ○ '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17. 2월
<p>○ 서울연구원의 전부 위탁 협력 연구의 경우 부적절한 연구발주가 있음. 김창보 전 시민건강국장, 서왕진 전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는 연구를 포함하여 연구 전반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함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의 전부위탁 협력연구를 포함한 연구원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기간 : '16. 12. 8 ~ 12. 21.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외 5명 - 중점감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연구사업 운영의 적정여부 ▶ 예산편성 및 집행, 출연금 및 기본재산 관리 적정여부 ▶ 자체수입 관리의 적정여부 ▶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여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감사위원회 부의 : '17. 3월 ○ 감사결과 통보 : '17. 4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보도 자료에서는 세부담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납세 내역에 대한 설명 자료는 없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보도자료에 '16년 1인당 시세부담액 규모(1,409천원)가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시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향후 보완이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예산안 보도자료 배포 시 1인당 시세부담액을 포함한 관련 내역을 작성토록 하여 시민이해도 제고
<p>○ 서울시 지원 교육청 예산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가 상이함. 동일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개선 조치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규모는 편성 예산과목의 차이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법정전출금 4개 과목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전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매입부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교육청은 교육부지침에 따라 법정전입금 6개 과목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전입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지방세법), 교육급여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교육급여보조금은 법정전출금으로 재분류하여 일치시켰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市 편성예산이 아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예산안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결책 모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 기준 편성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서 작성됨. 정부지침에 맞게 정확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임(행정자치부 지침 p.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행자부지침이 통보되기 전, 실·본부·국의 예산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시차원에서 잠정기준을 제작·배포 <p>〈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지침) 〉</p> <p>※ 작성시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별 작성시구분 (이하 생략) ○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 소요재원의 재원별 내역은 (이하 생략) ○ 산출근거내의 당해연도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산출근거의 산출기초 부분 표시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원활한 예산심사가 가능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예산안에 과년도와 당해연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서울시 교육청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이 서로 맞지 않는데 기준을 통일시켜 금액을 맞춰주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법정전출금 항목과 교육청 세입항목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 법정전출금은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매입부담금으로 구성(4개항목) - 교육청 중기교육재정계획상 세입은 <u>서울시 법정전출금</u>과 사회복지사업비로 분류하고 있는 <u>교육급여보조금</u>, 정부(국세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u>임(6개항목) ○ 교육급여보조금은 법정전출금으로 재분류가능하나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국세청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 한곳을 지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교육부 내시금액)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강원도 선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성질별로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표기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편성 안한 보육료 편성(여성가족정책실-6천 84억)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총괄 : 보육담당관, 협조 :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17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 누리과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8,600억원중 서울시교육청 교부금으로 1,422억원, 5개월분을 편성함 ○ 서울시교육청도 1,4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개월분은 교육부 예산을 고려하여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교육청 교부금 전입과 연계하여 누리과정 예산 집행 예정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장 공약사항 중 제 3기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의 경우 2013년 도시철도 조기 추진 공약과 다르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음(2023년 완공 예정은 단 하나뿐임)에도 기조실에서 정상추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6기 공약은 서울시 규칙 등에 따라 연차별 공약추진계획에 의거, 반기별(6월말, 12월말 기준)로 추진실적을 점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실적은 공약 주관 실·본부·국 자체평가 및 기획조정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으로 분류하여 공개 ○ 정책공약 ‘제3기 도시철도 조기 추진’의 경우, ’16.6월말 기준 추진실적에 일부 지연되는 부분은 있으나, ’18.6월까지 목표로 설정한, ① ‘7개 노선 협약체결, ② 5개 노선 착공, ③ 1개 노선 개통’은 공약 주관본부인 도시교통본부의 자체평가와 기획조정실 종합평가 결과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추진으로 분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2월 현재, ’16.12월말 기준 공약이행 추진실적 점검중으로, 협약체결 실적, 사업자 선정, 공사 착공 여부 등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의 자체평가 결과 및 향후 목표달성 가능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종합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약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 추진실적 점검 : ’17.1월중 - 공약 추진실적 분류·공개 : ’17.2월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년내 걸어서 10분내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민간투자를 포기하고 있음.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할 경우 과연 민간투자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직접 재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검토결과 전체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국·시비 총 추가부담액은 3.6조원(국비 1.9조원(0.9조원 → 2.8조원) / 시비 1.7조원(2.4조원 → 4.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추가 부담액 관련 건설예산 부족분 및 운영비를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경우 채무비율 법정기준(25%) 초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한편,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정부(기재부) 부담비율이 12% → 40%로 증가하여 국비 추가부담액은 1.9조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적격성 사업으로 판단하여 민자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 정부(기재부)가 재정사업 추진을 승인한다 하여도 지원율을 40%가 아닌 당초 12%를 고수할 경우, 추가 부담분인 1.9조원에 대한 시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착수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17.1~12)」 시 재정전환 가능성 여부 검토 및 국비지원 협의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TBS교통방송이 현재 사업소인데 향후 법인화 추진하고 공공의료 보건재단도 설립추진 한다고 들었음. 법인화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의견에 따라 기준없이 진행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편 타당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S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설립추진 관련 내부 검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S 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15.10~'16.2) ○ 향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자치부 설립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재단설립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행정자치부 협의 : '17년 상반기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17년 상반기
<p>○ 위, 수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이 법인인 경우, 등기이사의 임기 등 정관규정에 따른 이사 재선임 등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음. 확인 후 시정조치 하기 바람 (총괄 : 조직담당관, 협조 : 민관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중 비영리법인에 대해 등기이사 임기만료 및 재선임 여부 확인 후 필요시 시정토록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민관협력담당관-1626 , '17.1.23.)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수탁법인에서 법인 정관에 위배되는 조직운영으로 위탁사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수탁 협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비위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등 사후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의 내용·단계별 세분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에 반영('17.2~4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의 경우,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음. 따라서 기존 산하기관 이사회의 대리 참석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법률적 검토 후 시정하기 바람</p> <p>(총괄 : 공기업담당관, 협조 :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법률자문결과(행자부 포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당연직 이사의 출석 및 의결권 위임 가능 <p>《 규정현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개 출자·출연기관 중 2개 기관(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근거 미비 <p>《 운영개선 방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하게 대리 참석 시 차하직급(국장 ⇨ 과장) 참석을 원칙으로 운영 ○ 위촉직(선임직) 이사의 경우, 회의불참 시 의결권 위임불가 원칙 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근거 미비한 2개 기관(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정관 개정 조치 실시 : '17. 2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립대 문화가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글로벌한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들이 노력해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시립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추진방향 》 진취적이고 글로벌한 인재 육성을 위해 수업 외 학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풍 리노베이션 활동 전개</p> </div> <p>○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창의 세미나실 설치('17.2~3) -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소규모 미팅,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p> <p>○ 학생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통섭 교육활동 공간인 융·복합 스터디룸 조성('17.2) - 학생 간 자유토론 지원 위한 브레인스토밍룸 조성</p> <p>○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강의 확대 추진('17.3~)</p> <p>○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16~) - 총학생회, 스포츠과학과 협조를 통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 개최, 여자축구부 창설에 따른 각종 대회 참가 및 응원 확대, 미식축구부 지원확대</p> <p>○ 시립대인이 읽어야 할 추천도서 100선 선정('17.1) - '17.1학기부터 시사 및 현안이슈를 전문가의 특강 형식으로 강의하는 교양 강좌 추진</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한 해외 단기탐방 프로그램 신규 도입('17.5)</p> <p>○ 서울 동북부 지역 대학 여자 축구 등 다양한 체육대회 참가 및 교류전 추진('17.5~11)</p>

건의사항

조치결과

○ 실무사무관제 관련 수의와 농업직만 빠져있음. 직원들이 잦은 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수직군에도 실무사무관 제도 등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조직담당관)

추진상황 : 완료

추진내용

- 실무사무관은 소수직렬을 중심으로 '17년 상반기 15명을 추가 지정하여 총 99명까지 확대
 - 실무사무관 신규지정 현황 : 15명 (총 84 → 99명)
 - ▶ 행정직군 : 총 5명(행정 5명)
 - ▶ 기술직군 : 총 8명(기계, 전기, 화공, 건축, 환경, 방송통신, 녹지, 수의 각 1명)
 - ▶ 연구직군 : 총 2명(보건연구, 환경연구 1명)
- 수의직렬은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과에 수의직렬 실무사무관을 신설

※ 수의직렬 정현원 현황

(단위: 명)

전체		4급			5급			6급		7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비율	정원	현원	비율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1	42	1	1	2.4	8	8	19.5	25	23	7	10

- 다만, 농업직렬은 5급 비율이 23.5%로 전체 직렬 평균 14% 대비 높은 수준으로 상위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농업직렬 정현원 현황

(단위: 명)

전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비율	정원	현원	비율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7	17	1	1	5.9	4	4	23.5	9	7	3	3		1		1

향후계획

- 실무사무관 배치·운영 : '17.1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미만임. 8명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7명만 채용되어 있으며 5명만 실질적 장애인이고 2명은 활동보조인임. 주로 청소 및 건물관리 분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보조업무 보다 주된 업무 담당자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서울연구원)</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8명 고용 달성('16.12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채용공고를 통해 연구직(위촉연구원) 1명 신규채용('16.12)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연구 분야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p>○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청년을 위해 시가 직접 푸드트럭을 확보해 저소득청년들에게 제공하고, 푸드트럭 사업수익의 일부로 트럭 비용을 매달 갚게 하여 지급완료되면 청년들에게 소유권을 인도하는 방식의 지원방안 검토 바람 (식품안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푸드트럭을 제작하여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재산의 푸드트럭 운영 수요가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시 및 자치구 소유·운영시설 관리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추진 ○ 푸드트럭 제작 운영 관련 법령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트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제3호의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제5조의 일반재산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대부분 기간이 1년으로 사업수익에 따른 비용 충당에 어려움 있음 ○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푸드트럭 임대사업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푸드트럭 운영(DDP 내) : 운영대수 4대('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미래창조재단 기부금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트럭 활성화 계획 수립 : '17. 2월말 ○ 푸드트럭 제작을 위한 수요기관 파악 : '17. 3월~ ○ 푸드트럭 임대 운영실시(야시장 연계) : '17. 5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성산 시영아파트 노후 수도 배관공사 비리 사건과 같이 비리를 신고하는 경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비리(예산낭비) 신고 민원인에게 예산절약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총괄 : 재정관리담당관, 협조 : 상수도사업본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제보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방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에 따라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불법지출 관련 증거제출이 필요하며,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신청하여야 함’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였음(‘17.1) <p>《 시민예산성과금 집행률 향상방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신고 홍보활성화 계획 수립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p>《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제보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방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 신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시민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안건 상정여부 결정 등 추진(‘17.3) <p>《 시민예산성과금 집행률 향상방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신고 접근성 향상,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지하철광고, 홍보물 배포 등 대시민 홍보 강화(‘17.2)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노량진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중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과정에 차은택씨가 관련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람 (도시농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량진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비선실세개입 경위 파악('16.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력(제휴) 의혹 대상자 :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차은택(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주요내용 : 현대화시장의 활성화 목적으로 (주)오에이씨 (대표이사 : 이성한)와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A 체결 및 TF팀 결성, (주)오에이씨 추천으로 차은택 등 4명 자문위원 선임 후 (주)대명레저산업 등 여러 업체와 업무제휴 추진('14.10) ▶ 업무협력(제휴) 결과 뚜렷한 성과부재로 수협중앙회 감사결과 지적 및 수협노량진수산물(주) 자체 판단으로 MOA 체결 파기 및 TF팀 해체('15.8) - 위촉 이후 업무제휴 관련 대가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노량진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협중앙회 및 수협노량진수산물(주)를 검찰에 고발('16.11)하여 조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시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가 여러 국제기구의 의장 도시로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국제기구 유치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제기구 유치비용 대비 효용성 등을 고려하고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도록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해외도시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유치·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중 (용역기간 : '16.10.10 ~ '17.4.7(6개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결과 보고(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시기 : '17.4월 중순 ※ 2차 중간보고 : '17.2월 하순 - 보고내용 : 국제기구 유치 타당성 분석(지원 대비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지원기준 마련 등 중점 보고
<p>○ 정부합동평가 관련 '다'등급 5개 받는 등 평가가 저조함. 도농간 차이를 감안한 대도시와 농어촌간 구별된 지표 등 서울시에 불리한 지표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지표 개선을 건의할 것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 불리한 지표 발굴 및 개선 건의 상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지표개발워크숍(4월), 행정컨설팅(10월) 참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에도 지속적으로 지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개발워크숍에서 개선 건의('17.1~2)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민부분 예산절약성과금 집행률이 낮음. 시민부분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하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 외 사례금 지급제도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성과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 적극 활용 ○ 예산낭비신고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예산학교에서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교육 실시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접근성 향상 -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및 시정홍보 매체(전광판 등) 활용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심사 시 ‘사례금 지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독려 : '17.3월 ※ 2016년도 신청분에 대한 성과금 등 지급심사 개최 : '17.3 ○ 예산낭비신고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 '17.2월중
<p>○ 전 부서의 사회적배려 대상 기업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등이 법률규정에 의한 최저치의 목표가 아닌 목적의식적인 노력으로 우선구매 및 계약 등에 노력하여 줄 것 (총괄 : 경제정책과, 협조 : 사회적경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반영 및 구매 촉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17.1.5, 경제정책과-327) ○ 여성·장애인·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17.1.6, 경제정책과-399)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요청('17.1.19, 실국장 회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여성·장애인·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 수립 : '17.2월 ○ 여성·장애인·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독려 : 정기적(분기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위한 기관별 실적 관리 및 독려 : 정기적(월별, 분기별)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채무는 감소한 반면 부채는 늘어난 상황임. 채무 부채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여 주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0월 대비 우리시 부채는 16,679억원 증가한 281,881억원('16.12월말 기준) ○ 부채증가 사유는 임대주택 확대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가, 중도금 등 공사 진척에 따라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뀌는 선수금, 버스재정지원금 등 미지급금 발생 등임 ○ 시 본청의 채무규모 역시 지하철 건설채무의 이관 및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입 등에 따라 일부 증가('11년 대비 1,477억원)하였으나 ○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건전한 수준의 재정운용 실적을 보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의 지자체 재정건전성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채무와 부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되, ○ 동시에 시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투자 역시 실기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음
<p>○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지원예산이 미편성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현황을 주시하고 서울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총괄 : 보육담당관, 협조 :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17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 누리과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8,600억원중 서울시교육청 교부금으로 1,422억원, 5개월분을 편성함 ○ 서울시교육청도 1,4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개월분은 교육부 예산을 고려하여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교육청 교부금 전입과 연계하여 누리과정 예산 집행할 예정임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경전철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일부 사기업의 포기가 있음. 민자유치 사업 진행의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전철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 도시교통본부와 협업을 통한 대안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전철 노선중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민간제안이 미비한 노선에 대해 재정사업 적용 가능성 검토 - 재정사업 가능노선에 대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재정사업 가능노선에 대한 투자순위 검토 - 재정사업 가능노선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 협의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전철 사업방식 및 재정전환 가능노선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도시교통본부와 협업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17.1~12)」으로 검토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위원회나 자문단 등 거버넌스 위원 위촉 시 시의 홈페이지나 공고 등을 통해 원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관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절차 및 방법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DB 인력풀 등을 활용하고 인터넷, 관보게재 등을 통한 공모제 시행 -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 시, 기본자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위촉절차 및 방법 준수 철저’ 공문 시행('17.1.9) ○ 위원회 구성·재구성 시, 위촉절차 모니터링('17.1.9)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절차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실시
<p>○ 재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디지털재단, 오십플러스 재단 등).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규정 현황 조사·분석 및 정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대상 : '17.1.23 ~ 1.26 / 21개 투자·출연기관 - 추진 내용 : 전 기관 규정 현황 조사·분석, 기관 공통 표준안 제정 의견 수렴 등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정비 컨설팅 업체선정 및 과업시행 : '17. 2 ~ 5월 ○ 기관별 규정정비 계획 수립 : '17. 6월 ○ 규정정비 실행 : '17년 하반기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편성된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음. 최근 3~5년간 징수액의 평균을 내서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 지방세는 주로 단순추계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의 경우, 최근 3~5년 결산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p>○ 서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향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구 변동 시 시설 인프라 등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인구 1천만일 때와 9백만일 때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기초실, 연구원, 시립대 등이 협력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총괄 : 예산담당관, 협조 : 안전총괄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노후화 대응 TFT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기획조정실, 안전총괄본부, 노후기반시설 실·본부·국, 서울연구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 기능 : 소요재원 파악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등 분야별 노후기반시설 정밀 실태조사 지침 마련 ○ 체계적인 일상점검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검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노후화 대응 TFT 운영 : '17.2 ~ 12월 ○ 향후 5년간 투자계획 수립(중기재정계획 연동) : '17년 ~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공사채 발행의 경우, 서울시 이자율이 시중의 이자율보다 저렴함.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보장금리가 4.8%임을 감안하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향후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연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 추진상황 : 검토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9호선의 경우 재구조화를 통해 금리를 4.8%수준으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수익성이 반영됨으로 인해 서울시 공사채 발행금리(도시철도공채 금리의 경우 1.25%)보다 높은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단점으로서 재정사업보다 재원조달의 효율성이 낮은 것을 의미함 ○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저금리대출로 대환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금리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우이~신설선) ○ 서울시 민자유치 정책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한도(2% 재정준칙) 등 총량적 관리방안 모색 - 市 재정여건을 감안한 민자유치 적정규모 검토 등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민자유치 정책에 대한 연구과제 추진(~'17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민자사업 관리방안, 민자유치 방안 등 연구 ○ 경전철 분야 민자사업 추진여부 관련하여 도시교통본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17.1~12)」 을 통해 검토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진행중, 준비중인 민간투자사업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자료 보완 제출 (2016.11.23)
○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 아디스아바바에 대해 실시한 교육내용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2014년~2015년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푸드트럭과 관련된 현황자료 (몇대, 어디서, 어떻게 운영)를 제출하기 바람 (식품안전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9)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거버넌스 실무회의 회의록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수탁 기관이 사무를 재위탁한 현황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현황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지구촌나눔한마당, 다문화 축제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예산 집행내역 (국제교류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최근 3년간(2014~현재) 예산절감성과금 지급현황 - 시민, 공무원 구분하여 포상 또는 성과금 지급사례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2015년~2016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2015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기제출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지역생활발전협의회 현황 (대외협력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사업에 대한 향후 세부집행계획 (해외도시협력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가 국제기구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내용, 세부사업계획 (해외도시협력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2016년('15년실적)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생활임금제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동일임금, 유사직무를 하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생활임금제 확대계획 /현황 생활임금제 MOU 확산실적 및 협약서 사본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2016년 4개 신규 자매우호 결연도시에 대한 체결 절차와 과정, 협약서 (국제교류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관련 자료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사업 자치구별 목록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최근 5년간 행정심판위원회 자치구별, 분야별 현황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기피업무 사례분석을 통한 조직문화개선 추진 현황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부서간 회의 개선 내용 - 회의내용, 참석대상자, (정례/수시 구분), 회의목록, 개선내용, 회의안건, 2015년과 2016년 비교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관련 - 계획서, 시와 자치구간 송수신 공문 사본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주민참여예산제 디지털 기반 토론회 관련 내역 - 토론자, 회의내용, 개선방안 등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2016년 행정심판 사건 중 민생사건(유형별, 자치구별) 처리현황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행감요구자료 1631p 94번 자료 김○○ 실명으로, 주요 양력 3가지 기재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2017년 서울시 전출금과 교육청 자치단체 이전수입 차액 발생 사유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최근 10년간 시민 1인당 예산액, 세 부담액 (재무국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1.15)
○ 시정고문단 명단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6.12.2)